



세계는 격변하고 있고, 좌파가 할 일은 많다

당장 박근혜의 “노동개혁”을 좌절시켜야 한다

국제 사회주의자들의 토론
격변하는
세계와 좌파

10, 11, 12 면

“노동개혁”과
노동자 투쟁

2, 3, 4, 5, 20 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칼럼
러시아의
시리아 폭격도
제국주의적 군사 행동

13 면

논쟁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요구,
어떻게 볼 것인가?

6~7 면

레온 트로츠키
중간주의는
무엇인가?

8~9 면

[연재] 스웨덴과
사회민주주의
후퇴하는
스웨덴 복지국가

16~17 면

진화심리학
그럴싸할 뿐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17 면



진중권

10월 총파업을 성사시키고 11~12월로 투쟁을 확대해 가자

박설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많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임금노동자 61퍼센트가 '노사정 야합이 정부·재계의 일방적 입장을 반영했다'고 답했고, 취업규칙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무려 81퍼센트가 우려를 표했다.

한국노총 내에서도 반발이 커졌다. 금속노련은 지난 9월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노총 지도부에 "입으로만 [중대결단]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장과 조합원에 게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합의 파기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 속에서 정부는 논란이 되는 쟁점들을 노사정위 후속 논의에서 합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 1일과 5일 두 차례 회의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한국노총은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면서 일단 시간을 끄는 모양새다. 곧 본격화될 정기국회 논의와 맞물리도록 하려는 의도인 듯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를 또다시 국회 논의기구로 가져가 논란을 벌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개악 법안들을 발의했고, 전직 장관들까지 나서 "노사정 합의를 거부하는 세력의 요구에 타협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요컨대, 박근혜는 단호하고 속도감 있게 노동 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가이드라인, 법 개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야합 직후 9·23 총파업에 나선 것은 옳았다. 이날 비록 많은 사업장이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급박한 일정에도 꽤 많은 노동자들이 서울로 상경해 이후 투쟁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민주노총은 이후 투쟁 계획도 일부 확정했다. 일단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 즉각 총파업, 국회상임위(법안심사소위) 상정 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투쟁이 더 효과를 내려면, "법안 상정 시", "가이드라인 발표 시" 파업에 나서는 것은 물론이고, 선제적으로 투쟁을 배치해 정부의 개악 추진에 차질을 주고 투쟁의 힘을 키워 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당면한 10월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민주노총은 10월 12~17일을 총파업 및 총력투쟁 기간으로 정했다.

특히 공공운수노조는 10월 15일 총파업에 돌입하고,

전국 집중 상경 투쟁을 벌인다. 노동운동은 10월 투쟁의 선두에 서 있는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엄호해야 한다.

철도노조 같은 주요 노조들이 공공운수노조의 파업 지침을 이행해야 한다. 좌파 활동가들이 공공운수노조의 파업 지침을 이용해 자기 노조가 파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기층에서 실질적인 조직화에 나선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공공 파업을 다른 산별·부분으로 확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금속노조가 비록 임원 선거 이후 조직정비 기간 이더라도, 민주노총의 투쟁 호소에 호응해 파업에 동참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현대·기아차지부는 선거 기간이지만, 아직 쟁의권도 살아 있는 기회를 이용해 파업에 나설 수 있다. 더구나 차기 집행부 하에서도 이어질 임단협의 핵심 쟁점들은 적다 정부의 정책과도 긴밀히 결합돼 있다.(통상임금, 임금체계, 임금파괴제, 노동시간 등) 10월 파업 동참은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의 조건 방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이 같은 민주노총의 투쟁은 당장 노동 개악으로 커다란 고통을 입을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 악화를 막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10월 총파업을 성사시키고 11~12월 총파업으로 이어가자.

민주노총 10월 총파업-총력투쟁 일정

전국 토목건축 노동자 총력 투쟁

2015.10.13(화)~14(수) 1박2일 서울 도심

공공운수노조 총파업 투쟁

2015.10.15(목) 오후 2시

서울 도심(전국 집중 상경, 추후 공지)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2015.10.17(토)

2015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2015.10.24(토) 오후 3시 서울역

지역별 민중대회

10월 17(토)~31일(토) 전국 곳곳

(자세한 일정은 웹사이트(wspaper.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 개악에 맞선 운동 방향 논쟁

파업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자?

박근혜 정부가 "노동 개혁"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이에 맞선 대응 방안을 두고 정의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민주노총 등이 잇따라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우려했게도 이 토론회들은 (전적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총파업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는 논의들로 채워졌다.

9월 24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긴급 토론회에서도 발표자들은 대체로 이런 주장을 폈다. (전종휘 <한겨레> 기자, 조돈문 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처장 등) 총파업은 안 되니 거리시위로 가자거나, 국민적 여론을 모아 나가자거나, 노조 가입 운동을 펴자거나, 정규직이 양보하라는 제안이 그것이다.

하반기 총파업 투쟁의 시기와 방식을 두고 논의가 한창인 지금, 민주노총이 토론회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 방향은 그에 부합한 것이 아니었다. 총파업을 주장한 발표자는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뿐이었다. (그조차 권영국 변호사의 연행에 따라 대신해 나왔다.) 애당초 패널 구성 등 기획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이날 정리 발언에서 "(정규직의) 선제적 양보 문제에 대해 내부에서 심각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제 조합원들의 발등을 찌고 힘을 갈아 먹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이창근 실장의 말이 진정 민주노총의 책임 있는 발언인 것인지 묻고 싶다.

잠재력

한편, 국회 논의를 통하거나 현실 가능한(그래서 때로 정규직의 양보를 포함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국민적 지지를 얻고 어느 정도 개악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런 주장은 총파업의 필요성을 기각하는 것으로 이어지곤 한다.

그러나 박근혜가 누누이 "노동개혁"을 국정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듯이,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와 지배자들은 아주 집요하게 노동계급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는 여러 논란 속에서도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고 개악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노동 개악에 제동을 걸려면, 상당한 투쟁의 힘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정부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자본가들의 이윤에 차질을 줄 노동계급의 잠재력, 즉 파업을 최대한 큰 규모로 일으키기 위해 애써야 한다.

그런데 적잖은 활동가들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나설 수 있느냐며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상반기 총파업에 비록 파업에 돌입한 사업장이 많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온건한 노조 지도자들이 총파업 전선에 초를 치거나 힘을 싣지 않았기 때문이지 조합원들 탓이 아니다.

오히려 현장 조합원들은 노조 지도부가 단호하게 파업을 호소하면 이에 응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총파업을 내세웠던 "변방"의 한상균 위원장이 당선하고, 상반기 총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던 것은 이를 보여 주는 사례다.

현장 조합원들이 상층 지도자들보다 왼쪽에 있다는 점도 거듭 드러났다. 지난해 강제전보 합의를 부결시킨 철도노조, 8월 29일 대의원대회에서 연가투쟁을 통과시킨 전교조 등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아닌 현대중공업노조 내에서도 9·23 파업에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적잖이 나왔다. 이 때문에 정병모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모인 집회에서 "파업을 선포하고 대규모 상경 투쟁을 했어야 했지만 입투 상황이 어려웠다"고 해명해야만 했다.

물론 이것이 곧 현장 조합원들이 노조 지도부를 건너뛰어 스스로 투쟁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아직 조합원들의 자신감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노조 지도부에 의존하지 않는 '아래로부터 총파업'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혹은 일부 활동가·투사들의 소수 행동으로 그칠 위험이 있다.

그보다는 노조 지도부의 공식적인 파업 호소를 기회로 삼아 기층 조합원들의 사기와 활력을 올리는 것이 활동가들의 과제다.



진중권

10월 13~14일 건설노조 토목건축 노동자 상경 투쟁

임금·고용 등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

장우성

건설노조 토목건축 노동자들이 10월 13~14일 일손을 놓고 상경 투쟁을 벌인다. 건설현장에서 목수·미장·철근 등의 일을 하는 토목건축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돈 떼먹은 현장 뒤집고, 밀린 임금을 받았다. 다른 현장에서 또 돈을 떼였다.

“한 지역을 뒤집고, 지역 전체 임금을 올렸다. 다른 지역에선 아직도 저임금이었다.

“모두가 서울에서 만나 전국의 건설현장을 뒤집자!”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건설업 체불은 2010년 3만 3천3백72명(1천4백64억 원)에서 2014년 7만 7백42명(3천3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유보임금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체불을 부추겨 왔다.

유보임금은 노동자들이 일을 시작한 지 2~3달 뒤부터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이다. 이 때문에 공사가 끝난 시점에도 여전히 미지급된 2~3개월치 임금을 하도급업자가 지불하지 않고 버티거나 도주하면서 임금 체불을 양산하고 있다.

임금 체불은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돼 있지만, 정부는 실질적인 조사와 처벌을 하지 않



임금 체불·고용 불안·산재 사고가 만연한 건설 현장 인간다운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단결과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는다. 공기업인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발주 현장에서조차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1천3백62건(4백69억 2천9백만 원)의 체불이 발생했다. 하지만 LH공사는 고작 1백4건에 대해서만 조처했을 뿐이다.

임금 체불

휴일과 법정노동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10명의 일감을 5~6명에게 강요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은 일상적으로 건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안전보건공단이 올 초 발표한 것을 보면, 지난해 건설업 재해자는 2만 3천6백 명이고 이 중 4백35명이 사망했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9백

93명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치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상시적 고용 불안 때문에 건설현장은 실업난에 신음하는 청년들조차 쉽사리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곳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건설회사들은 이주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용하면서 노동조건 개선을 회피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묵인 방관하고 있다.

이번 상경 투쟁의 주요 요구는 ‘유보임금 근절’, ‘외국인 불법 고용 처벌’, ‘건설 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고법) 개정안 제정 촉구다. 또, 이번 투쟁을 통해 내년 ‘전국 차원의 단체협약 체결’도 목표로 세우고 있다.

유보임금 근절, 직접 고용 확대, 다

단계 하도급 규제 등은 건설 현장을 인간다운 일터로 만들기 위해 시급히 쟁취해야 할 요구다. 상경 투쟁이 중요한 이유다. 설사 이번이 이 요구들을 모두 쟁취하지 못하더라도, 상경 투쟁은 토목건축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단결을 강화해 이후 현장을 개선할 투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일부 건설기계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도 이번 상경 투쟁에 함께할 계획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이런 연대가 더 확대된다면 좋을 것이다.

다만 ‘불법 외국인력 고용 처벌’ 요구는 건설현장의 문제를 주범인 정부와 건설 회사가 아니라 이주노동자들 탓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아

래 기사를 참조하시오). 이런 요구는 노동자들의 광범한 단결이라는 과제와도 모순을 빚는다.

건설노조 투사들과 활동가들이 이번 상경 투쟁으로 조합원들의 사기가 높아지는 것을 계기로 미조직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적극 조직하면서 조직의 힘을 배가시키는 전술을 채택하는 방안을 고민해 나아가길 바란다.

이것은 비현실적인 방안이 결코 아니다. 비록 토목건축 노동자들은 조직률이 낮지만, 만만치 않은 투쟁과 조직화 경험이 있다.

토목건축 노동자들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물결 속에서 건설현장 노동자 중에 가장 먼저 노조 건설을 시작했다. 조직이 성장하면서 2003년에는 전국 3백여 개 건설현장에서 단협을 체결했고, 2004년 용인동백지구 파업과 대구 철근 노동자 파업 같은 인상적인 투쟁을 벌였다.

그 뒤 정부와 건설회사들이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악용해 악랄하고 흑심한 탄압을 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토목건축 노동자들은 최근 다시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2011년 이래 꾸준히 성장해 온 대구경북건설지부를 필두로, 전남·부산 등에서 지난해와 올해 조직이 확대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조직 이주노동자 조직에 나선다면 반목과 분열이 아니라 단결로 정부와 사측에 맞설 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현장 일자리 부족 — 이주노동자를 비난해선 안 된다

이정원

토목건축 노동자들이 건설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임금 체불이 대폭 늘고 산재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데서 보듯, 이런 법 제도 개선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요구다. 특히 노동자들이 원청 건설회사에 직접 고용되면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수 있다.

그런데 건설노조의 상경 투쟁 요구 중에는 부적절한 요구도 포함돼 있다. ‘외국인력 불법 고용’을 근절하라는 요구가 그것이다.

건설노조는 건설회사들이 ‘불법’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저임금을 강요하며, 내국인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정부에 ‘외국인 불법 고용 처벌’과 전자인력카드제* 전면 도입을 요구한다. 이주노동자 쿼터를 준수해 내국인에게 건설현장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라는 것이다.

전자카드제 도입의 주된 취지는 출퇴근 기록을 남겨 사용주의 퇴직공제부금* 납부 회피를 막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불법 인력’의 건설현장 출입을 막는 부수적 효과도 낼 수 있다.

건설현장 이주노동자의 80퍼센트가 ‘불법 고용’(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라

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노조는 사실상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의 고용을 문제삼는 셈이다.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엄격한 정부 규제 때문에 ‘불법’ 취업에 내몰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일자리 경쟁 격화와 임금 하락 압박의 책임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있다.** 특히 건설 대기업들은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노동자들 간 경쟁을 부추기고 사용자 책임을 외면하며 배를 불러 왔다. 그리고 지역·국적·인종에 따라 임금을 차별해 노동자들을 이간질했다. 정부는 법과 제도로 이를 뒷받침하고, 위법도 눈감아 왔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배척은 진정한 개선책이 아니다. 하도급 폐지, 직접 고용 확대,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과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진정한 해결

책이다. 이를 요구하며 정부와 사용자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와 단결해 공동의 적인 사용자에 맞서자

이런 요구들을 성취하려면 건설 인력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와 단결해 힘을 배가해야 한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를 배척하는 분위기가 커지면 내국인과 이주노동자 사이에 반목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 이는 공동의 적인 사용자에 맞서야 할 때 단결하지 못해 힘이 약화되는 치명적 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정부와 사용자들은 이주노동자 배척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척하면서 다단계 하도급 폐지와 같은 핵심 문제에서 빠져나가려 할 수 있다. 보수 언론들은 내국인과 이주노동자 사이의 ‘노-노 갈등’을 부각시키며 건설 노동자들의 진정한 요구를 은폐할 것이다.

이주노동자 배척은 노동조합의 성장에도 방해가 될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들에서 특히 해악적이다. 반면, 대구경북건설지부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비조합원 전체의 조건 개선도 함께 내걸고 투쟁하면서 인상적인 조직 확대를 이뤘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력의 중요한 일부가 된 지 오래다. 한국의 생산인구 부족으로 이주노동자 수는 더 늘

어날 전망이다.

흔한 상식과는 달리 **일자리나 임금 총량은 정해져 있지 않다.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우면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을 올릴 수 있다.** 관건은 노동자들의 튼튼한 단결과 단호한 투쟁력이다.

영국 건설노조의 투쟁 경험

이주노동자 배척 분위기를 방지하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 이주노동자 유입이 예고되는 플랜트 분야 등으로 퍼질 수 있고, 다른 산업 부문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건설노조 내 투사와 활동가들은 이를 방지해서는 안 된다. 이주노동자 배척 정책을 폐기하라고 지도부에게 촉구하고 기층 조합원들과 토론하고 설득해야 한다. 특히 **이주노동자 조직에 앞장섰던 지부의 경험 있는 활동가들, 건설노조에서 영향력이 있는 좌파인 노동계급정당추진위 회원들과 지지자들의 능동적 구실이 중요할 것**이다. 노동운동의 좌파와 활동가들도 이주노동자 배척 문제를 단지 건설노조 내 사안이라고 보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영국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도 한국활동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 위기가 강타한 직후인 2009년 1월부터 영국에서 건설 노동자 파업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사용자들이 잘 조직된 부문인 건설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기층 활동가들을 해고했다. 이에 맞선

한 건설현장의 파업이 순식간에 다른 건설현장들의 미승인 연대 파업으로 확산됐다. 그런데 이때 건설부문 고용불안이라는 조건 속에서 “영국인의 일자리는 영국인에게”라는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과 일부 좌파들은 이 파업에 적극 연대하면서도 이주노동자 배척 요구는 옳지 않다고 파업 노동자들을 설득했다. 연대 속에서 우호적 논쟁이 진행되자 파업 노동자들은 이 요구를 철회했다.

그 뒤 이 파업에 폴란드 이주노동자들이 가세해 힘을 보태면서 투쟁은 승리로 마무리됐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민족주의적 태도를 바꾸면 이주노동자들과 단결해 싸워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이 과정은 자동적이지 않았다. 영국의 좌파와 활동가들이 오폭관언하거나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사태에 개입한 것이 방향 전환에서 중요했다. 한국의 좌파와 활동가들도 이로부터 배울 수 있다.

전자인력카드제

건설현장 취업 노동자의 출퇴근 정보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자동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전자카드를 소지하지 않으면 건설 현장에 출입할 수 없고, 위반 시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퇴직공제부금

단기 근무가 많은 건설 현장의 특성에 따라 도입된 퇴직금 제도. 사업주가 퇴직공제에 가입한 후 노동자의 노동 일수를 확인해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추천 소책자

이주노동자, 일자리를 빼앗는 적인가 함께 싸워야 할 동지인가?
이정원 지음, 3,000원, 56쪽

구입 문의 :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

항의 운동을 기층으로 확대하고, 연대를 폭넓게 구축하자

양윤석 공무원노조 조합원, '사수넷' 회원

지난 9월 24일 박근혜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자치부는 10월 8일까지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강제 폐쇄하겠다고 한다.

조합원들이 민주적 토론을 통해 결정한 노동조합 규약을 트집 잡아 '법외노조'로 만들더니 이제 '법외노조의 사무실 사용은 불법'이라며 또다시 탄압에 나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악 직후 인천 남동구가 시작한 사무실 폐쇄 공격을 전국으로 확대하려 한다. '공무원 노동조건과 공공성 사수 네트워크(이하 사수넷)'를 비롯해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이 공격이 머지 않아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성과급제 확대, 퇴출제 실시,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공격을 밀어붙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사혁신처는 10월 1일 공무원 퇴출제를 위한 적격심사, 성과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성과상여금 균등 분배'를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과 함께 '성실의무 위반' 비위 유형으로 분류해 중징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제정을 입법 예고 했다.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는 이런 박근혜의 공격에 맞선 노동조합의 저항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박근혜는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배신적 타협을 한 이



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 폐쇄에 항의하는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반대 충북공대위'.

중재 전 위원장을 불신임하고 저항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중재는 그 뒤에도 노조 분리 책동을 벌이며 정부의 공무원노조 공격에 편승해 세를 불리려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쉽사리 무너지지 않았다. 지난 9월 19일에는 조합원 3천여 명이 정부의 추가 공격 시도에 맞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태세를 갖춰 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처럼 다시 일어서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무릎 꿇리려고 사무실 폐쇄 지침을 내린 것이다.

한편,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는 9월 23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직후 벌어진 공격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선 전체 노동

운동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가 신속하게 규탄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이 산하 조직들과 함께 적극 연대에 맞서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 공격에 맞서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노조와 지역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연대해 항의 행동을 시작했다. 10월 5일 행자부가 충북도청에서 각 시군 과장들이 참석하는 노조 사무실 폐쇄 지침 관련 회의를 소집했지만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조합원들의 항의 행동으로 무산됐다.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반대 충북공대위'도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지침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런 경험을 전국으로 알리고, 지부별 투쟁뿐 아니라 민주노총과 함께 전국적으로 힘을 모아 내는 항의 행동을 본격화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연금 삭감에 이어 성과급제 확대·퇴출제 실시 반대 등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후퇴에 맞선 요구를 사무실 폐쇄 시도 규탄과 결합시켜 현장 조합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층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이번 탄압 시도에 신속하게 규탄 성명을 낸 '사수넷'뿐 아니라,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은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에 맞서 항의운동을 기층으로 확대하고 폭넓은 연대가 구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대중공업 건설장비사업부 강제 휴업 조치

노동자에게 책임을 덧씌우지 말라

현대중공업 사측이 건설장비사업부에서 매월 일주일씩 강제 휴업을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경제의 침체가 수익성에 타격을 주자 노동자들에게 그 고통을 전가하려는 것이다. 사측은 12월까지만 휴업한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은 더 길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강제 휴업을 하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휴업 기간에 기존 임금의 70퍼센트밖에 받지 못한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아예 휴업 기간의 임금을 받지 못해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사실 전부터 건설장비사업부의 노동자들은 위기감이 컸다. 매각설과 청산설이 나돌아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이미 절반이 잘렸고 남은 노동자들도 한두 달씩 무급 순환 휴직을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덧씌우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5일에는 건설장비 노동자들이 중식집회를 하고 고용 보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다. 건설장비사업부의 대의원들은 사측에게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다. 사측은 경영설명회에 노조 간부는 들어올 수 없다며 가로막았다.

사측의 이런 태도에는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부추겨서 임금 인상 투쟁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강제 휴업에 맞서 노조가 투쟁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더 큰 고통을 당할 사내하청 노동자들과의 연대도 필요하다.

김지태

아쉬움이 남는 금호타이어 파업 유보

“새 집행부 선출해서 다시 투쟁을 시작해야”

이재환

9월 20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갑자기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을 유보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금호타이어지회는 다음 같은 사유를 들어 파업을 유보하고 선거 실시를 결정했다.

“단시일 내에 임금 협상과 투쟁이 타결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조직력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를 통해 새 집행부에 힘을 싣고 다시 교섭과 투쟁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새로운 집행부 선거가 진행 중이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2014년 성과급 배분, 임금피크제 반대 등을 요구하며 9월 20일까지 35일 동안 전면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성과급을 받으려면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라'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고, 급기야 직장폐쇄까지 감행했다. 노동부장관 이기권까지 나서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사측을 편들었다. 경총도 강성 노조가 문제라며 가세했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호타이어 투쟁이 다른 사업장들에게도 영향을 미칠까 봐 지배자들이 합심해 단호하게 대응을 한 것이다. 새누리당, 보수언론이 이 파업에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은 것은 물론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회 집행부는 결국 투쟁을 중단하고 복귀하는 길을 선택했다. 정부와 재계가 총공세에 나선 상황에서 이 투쟁에 가해지는 압력을 상당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조합원들은 한 달 넘게 전면파업을 벌이면서 굳건히 투쟁 태도를 유지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사측이 쌓아놓은 재고도 줄어 파업 효과도 커졌다. 따라서 노조가 투쟁 중단이 아니라, 공장 점거 등을 시도하며 더한층 사측에 타격을 가했다면 투쟁이 전진하고 연대의 초점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파업 유보 소식이 전해진 뒤 일부 노동자들은 실망과 울분을 토했다.

“파업을 유지하면서 해야 하는데 복귀하자는 것은 두 손 두 발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파업 기간 동안 임금이 나오지 않아도 지회가 투쟁을 하겠다고 하니까 감수하고 있었던 것인데, 얻은 성과도 없고 피해는 피해대로 입었습니다. 우리의 전통은 이런 게 아닙니다.”

“선거를 하더라도 파업을 유지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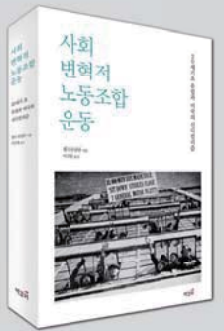
서 투쟁 동력을 유지해야지 이대로 들어가면 어떤 집행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힘을 얻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전 지회 대의원대회는 9월 30일에 종료되는 집행부 임기와 관련해 이번 투쟁이 끝날 때까지 선거를 연기한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

정부의 노동 개악이 금호타이어 임단협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던 상황에서, 노사정 야합 이후 민주노총이 호소한 9·23 파업을 며칠 앞두고 복귀한 것도 아쉽다. 이런 투쟁에 동참하며 더 많은 노동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조직해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 노동자는 “새 집행부를 선출해 다시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 이는 향후 당선할 집행부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10월~12월 노동 개악에 맞선 민주노총 투쟁에 함께 힘을 모으는 것도 금호타이어 투쟁에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 나왔습니다



사회변혁적 노동조합운동
— 20세기 초 유럽과 미국의 신디컬리즘

래프 달러턴 지음, 이수현 옮김.
책갈피, 552쪽, 22,000원

20세기 초 신디컬리즘 운동의 경험을 상세히 돌아보는 이 책은 한국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마주치는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이 책에 대한 자세한 서평이 본지 웹사이트에 있으니 꼭 읽어보십시오.

이주민 더 옥죄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한국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해 이주민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1월 발의한 개정안은 출입국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고, 그동안 사회적 지탄을 받아 온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제퇴거 할 수 있는 처벌 대상도 확대해 이주민들을 더욱 위축시키려고도 한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있다는 의심만으로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사업장 등에 출입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기존에도 영장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폭력적인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다치거나 심지어 숨지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불법성 시비가 있었는데, 아예 이를 합법화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마치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범죄의 온상인 양 호도하며 이런 천대를 정당화하려 한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곳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며 한국 경제에 기여해 왔다. 또한 불안정한 체류 자격 때문에 오히려 범죄의 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더 크다.

테러리스트

여기에 더해 9월 9일 정부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운송업자로부터 승객의 예약정보를 사전에 받아 자의적으로 탑승권 발급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존에는 이륙 혹은 출항 후 정보를 넘겨받아 국내 공항이나 항만에 도착한 후에 입국심사가 이뤄졌는데, 아예 출발지에서부터 탑승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는 국경 통제를 강화해 이주민들의 입국을 더욱 위축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자의적으로 이주민을 선별하는 권한이 강화돼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주민의 입국은 더욱 제한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도 국제 시위나 정부 비판 행사에 참가하려고 한국에 온 활동가들을 여러 차례 입국 금지했다. 역대 이주노조 간부들도 여전히 입국 규제 대상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인사들이 한국 땅에도 착하기 전에 막아 논란의 소지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다.

또한 난민들의 입국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 신청을 하려는 국가의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이 가능하다. 급하게 출신국을 빠져나오는 난민들은 비자 등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런데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운송업자로부터 받을 몇 가지 서류만을 근거로 탑승을 막는다면, 난민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인정 신청조차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테러 방지’를 이유로 들었는데, ‘이라크 · 시리아 이슬람 국가’ 등 정부가 흔히 테러리스트로 지목하는 세력이 활동하는 지역이 최근 난민이 급증하는 곳이라는 점도 더욱 이런 의심이 들게 한다.

대응

이주 운동진영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저지 혹은 최소화하려는 대응을 하고 있다. 물론 이 개정안은 정부의 개악안뿐 아니라 기존 출입국관리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진보적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출입국 관리법의 본질인 이주 규제를 근본에서 부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도 출입국 단속 때 영장주의를 도입해 폭력적 단속을 완화하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적법 절차를 지킨 “합법적” 단속에는 반대하기 어려운 맹점이 생긴다. 그러나 이미 20만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이리저리한 이유로 “불법” 체류로 내몰린 현실을 감안할 때 단속 추방 자체에 반대하지 않고서는 미등록 이주민을 온전히 방어하기가 어려워진다.

게다가 운동진영이 낸 개정안은 새정치연합 의원들을 통해 발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만 취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출입국관리법 개악에 비판적인 의원들도 출입국 규제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 이주 운동이 정부의 개악을 저지할 힘이 없으니 최악이라도 막아 보자는 심정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진보진영이 이주 규제를 부분적으로라도 수용한다면 이주민의 고통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해 이주 노동의 힘은 더욱 제한될 수 있다. 이주 운동은 모든 종류의 이주민 통제, 출입국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요구를 내걸고, 운동을 건설해 나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임준형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의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강동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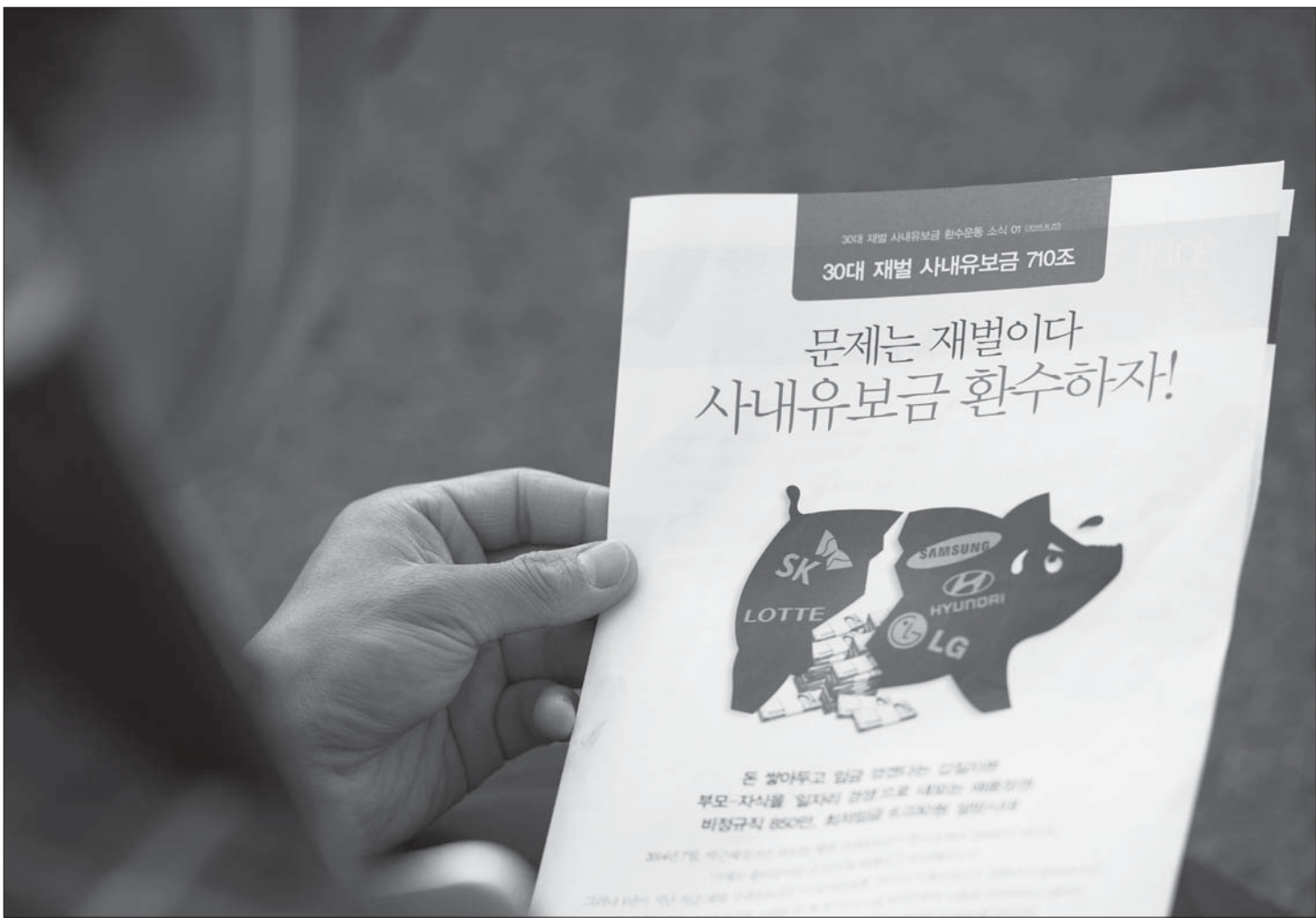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둘러싼 투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이하 추진위)는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을 벌이고 있다.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7백10조 원

중 1백57조 원을 환수해, “시급한 4대 민생 · 공공과제”인 최저임금 1만 원, 대기업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청년실업 해소, 공공의료 확충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추진위는 지난 9월 10일과 9월 24일 ‘인증샷데이’와 1인 시위를 한 데 이어 10월

7일에는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10월 24일은 4차 집중행동으로 ‘집중투쟁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는 재벌사내유보금환수결의대회를 연다고 한다. 또, 사업장 안에 현수막 설치나 대자보 부착 같은 홍보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지

사내유보금 환수는 혁명기 또는 ‘부분적으로 혁명적인’ 시기에나 제출될 이행기적 요구다

추진위가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을 벌이면서 좌파 내에서 ‘왜 사내유보금 환수인가?’ 또는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은 적절한 요구인가?’ 하는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사내유보금은 대차대조표에 나타나는 회계상 개념으로,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배당과 세금 등을 지급하고 남은 것을 말한다. 단순히 말하면, 사내유보금은 축적된 이윤인 셈이다. 따라서 사내유보금은 생산자본(공장, 설비 등), 상품자본(재고 등), 화폐자본(현금, 금융상품 등) 쪽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그 통속적 어감과 달리, 단순히 ‘쌓아둔 현금’이나 금융자산을 뜻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추진위가 내세우는 ‘사내유보금 환수’ 요구는 사실상 재벌 몰수 · 국유화를 뜻한다. 2015년 1분기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7백10조 원인데, 2011년 30대 재벌의 총자산은 1천4백60조 5천억 원이라고 한다(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 ‘30대 재벌의 국내 경제력 집중 추이’). 지난 3년간의 재벌 자산 증가를 고려한다 해도, 재벌 총자산의 절반 가까이 되고 자기자본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사내유보금을 환

수하겠다는 것은 재벌 몰수와 다를 바 없다.

사내유보금 전체가 아니라 1백57조 원만 환수하겠다고 하더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재벌 총수 일가의 지분 총액이 1백조 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1백57조 원 환수는 재벌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재벌 전부를 몰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절반만 혹은 1백57조 원만 몰수하겠다는 것이니, 환수 운동이 강력하다면 재벌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현재 현실의 계급세력 균형을 무시한 공상일 뿐이다. 지금 한국의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박근혜 정부를 앞세워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밀어붙여 수익성을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계급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내유보금 환수는 고사하고 법인세 인상 시도에도조차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 자산의 절반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은 실질적인 대중운동이 되기보다는 선전과 선동, 즉 이데올로기 투쟁으로 끝날 것이 뻔하다.

예를 들어, 1974년 영국 노동당은 국유화를 확대하고, 사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을 늘

린다는 ‘대안경제전략’을 내세우며 집권했다. 이에 대해 영국 국내외 자본들은 온갖 방법으로 노동당 정부에 압박을 가했다. 영국 전경련 회장 캄벨 애덤슨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취할 만한 온갖 대응 방안들을 논의한 운영위원회 회의가 생각한다. … 그 회의에서 우리는 투자 파업 … 재계가 투자를 보류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다양한 문제들도 논의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합법적이지 않은 방안들도 논의했던 것 같다.” 그러나 영국 전경련은 논의한 위협들을 실행에 옮길 필요가 없었다. 영국 노동당 우파가 장악한 정부가 대안경제전략 실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규모 긴축정책과 임금 삭감으로 대처 정부 전에 이미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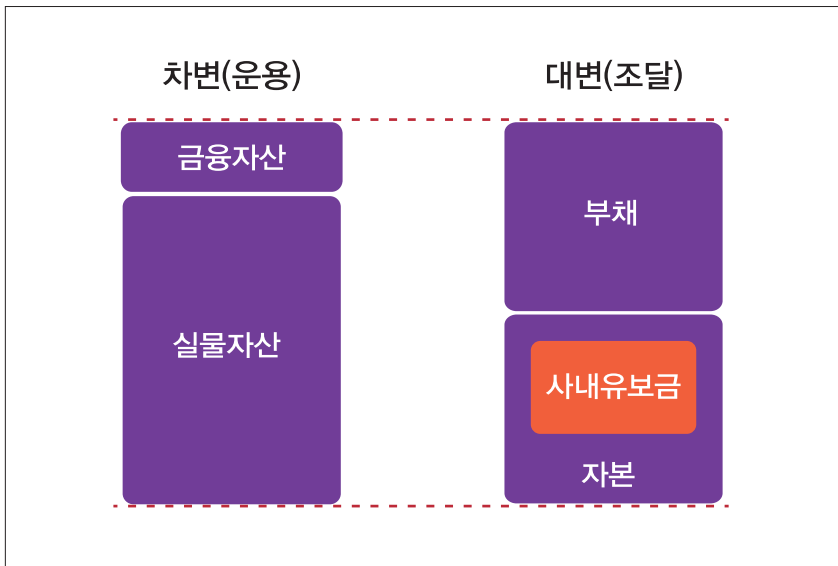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는 총수 일가나 대주주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배계급의 격렬한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내유보금 환수 같은 몰수 · 국유화 요구는 결국 노동계급 혁명과 정치 권력 장악으로써만 현실화될 수 있다.

사내유보금 환수를 ‘최소(강령)’ 요구로 제한하기?

그런데 추진위는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으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계급투쟁으로의 발전을 고려하기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개혁주의로 빠졌다”는 일각의 비판에 격렬하게 반발한다. 자신은 여전히 재벌과 기간산업 국유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은 재벌 환수 운동으로 발전할 유력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호기로운 선언과 달리, 정작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는 데서 추진위는 개혁주의자들처럼 자본주의 내에서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추진위의 김태연 정책교육위원장은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의 결과 기업이 축소되어 70~80퍼센트의 노동자들이 삼성전자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환수운동은 말이 안 된다’는 우파의 비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지금 재벌 사내유보금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기업 생산과 관계없이 턱없이 과다하기 때문이다. 국가 1년 예산의 두 배나 되는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7백10조 원



사내유보금의 회계상 개념도.

중 4대 민생·공공 문제 해결을 위한 1백57조 원 정도를 환수했을 때 기업의 생산을 축소해야 할 상황인가?” 하고 반문한다.

‘사내유보금 환수를 발판으로 재벌 몰수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재벌 경영 위기는 문제가 아니다’ 하고 답변한 게 아니라, 재벌의 생산 체계에 타격을 주지 않는 “과다한” 사내유보금만 문제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다. 게다가 김태연 위원장이 “기업의 생산을 축소

해야 할 상황인가?” 하고 반문하는 데서 보듯이, 추진위의 전망은 재벌의 반발 때문에 필연적으로 환수 운동이 더 발전하든지 아니면 재벌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전혀 보지 않고 있다는 점도 드러난다.

추진위는 개혁주의 단체가 아니다. 하지만 사내유보금을 4대 민생·공공 과제에 사용하겠다고 할 때 채택하려는 방식은 환수 운동을 개혁주의적 틀 안으로 옥여넣고 있음을 보여 준다. 추

진위는 환수한 사내유보금 1백57조 원의 용처를 이렇게 제시한다.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한 보조금 1백20조 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보조금 10조 4천4백억 원, 청년 취업자 1인당 월 1백만 원 보조금 16조 원 지급 등. 사내유보금을 환수할 정도로 계급투쟁 수위가 높은 상황이라면 재벌의 경영권을 박탈하거나 박탈을 위협할 힘을 노동계급이 갖게 됐음을 뜻한다. 그런데도 그 힘으로 최저임금 1만 원, 대기업 간접고용 정규직화, 청년고용 확대 등을 하도록 자본과 국가를 아래로부터 압박하는 게 아니라 환수한 돈으로 다시 재벌을 포함한 자본가들과 협의할 계획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다른 개혁주의자들과 똑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설사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더라도 자본가들이 실제로 청년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임금을 올리리란 보장이 없다는 문제 말이다.

이런 이데올로기적 혼란은 처음에 재벌에 대한 다계급적인 대중적 반감을 표현하는 포퓰리즘적 요구로서 사내유보금 환수를 선택한 데서 비롯한 듯하다. 그러나 자본 전체가 아니라 특

별히 재벌만을 문제 삼는 민주주의(인민주의)적 전략이 이제 핵심 문제다. 이 전략을 통해 추진위는 사내유보금 환수로부터 재벌 몰수와 노동자 권력이라는 더 급진적인 전략으로 나아가려는 것으로도 보이고 싶고, 또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실현 가능한 듯한 사내유보금 환수·사용 계획을 제안함으로써 광범한 대중적 지지를 받을 만한 것으로도 보이고 싶어 하는 듯하다. 이처럼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것을 합리화하고자 할 때, 재벌을 절반만 몰수하겠다는 사내유보금 환수 요구가 안정맞춤인 것이다.

한편, 사내유보금 환수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 같은 노동자들의 당면하고 중요한 투쟁을 회피하는 대의명분도 된다. 물론 추진위는 “노동 개악에 맞선 총파업 투쟁과 환수 운동의 문제의식을 적극 연결시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천과 강조점에선 사내유보금 환수를 “대안적 프레임”으로 제시하고 이를 선전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투쟁에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도록 선동하고 조직하는 데서는 사실상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 정세가 이행기 강령을 제출할 때인가?

앞서 살펴봤듯이, 사내유보금 환수가 개혁주의적 공상이 되지 않으려면 노동계급의 권력 장악이라는 전략 속에 자리매김 돼야 한다. 그러나 추진위는 의식적으로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아 중간주의를 맴돌게 된다는 점도 살펴봤다. 중간주의는 혁명적 노선과 개혁주의 노선 사이에서 불안정하게 동요하는 노선을 말한다.

결국 사내유보금 환수 요구는 노동자들이 대중 행동을 통해 혁명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전환(“이행기”) 강령의 일부가 될 경우에만 의미가 있고, 또 그 성취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전환 강령이 제기돼야 하는가? 그리고 그 전환 강령에 사내유보금 환수가 포함되는 게 적절한가?

전환 강령이란 무엇인가? 해결책이 혁명밖에 없는 매우 심각한 “국가적 위기”(이는 레닌의 표현이다) 상황에서조차 종중 노동계급은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싸우는 과정에 놓인 대중이 현재의 요구와 사회주의적 혁명의 강령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건너도록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돕는 것이 필수적이다.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전환 강령이 제기되는 것이다. 전환 강령은 현재의 객관적 조건과 광범한 노동계급의 의식에서 출발하면서도, 노동계급을 권력 장악으로 이끄는 요구들이어야 한다.(바로 이런 의미에서 ‘전환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는 전환 강



적절한 시기 적어도 현재 그리스 수준의 위기와 계급 세력 관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령을 ‘연결된 요구들의 체계’라고 말했다. 요구 A를 성취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요구 B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납득시킨다. 요구 B에 대한 유사한 경험은 노동자들에게 요구 C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할 것이다. 기타 등등. 이 연관성은 결국 권력 쟁취까지 나아간다.

그러나 만일 전환 강령이 이런 논리적인 연속성의 일환이라면, 어떤 요구도 그 자체만으로는 전환적 요구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전환적 요구는 오직 그 요구가 노동자들의 현재 의식에서부터 혁명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지로 연결될 때만 전환적인 것이다.

이런 고려 속에서 1930년대에 전환 강령을 제출하면서 트로츠키는 특정 부문이나 특정 집단의 자본 몰수 요구는 전환 강령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고 그 경제적 지배를 끝장내는 몰수 역시 사회주의 강령에 포함된다. 그러나 여러 핵심 산업부문이나 자본가 계급의 가장 기본적인 집단에 대한 몰수를 요구하는 것도 또한 특수한 전환기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다.”

그러면서 트로츠키는 미국의 ‘60대 대자본’과 프랑스의 ‘200대 대자본’처럼 대중적 분노를 사는 “봉건 자본가

영주”들의 재산 몰수를 전환 강령의 일부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쨌면 한국에서 재벌 몰수 또는 사내유보금 환수는 전환 강령에 포함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트로츠키는 이런 몰수 요구가 흐리멍덩한 개혁주의자들의 ‘국유화’ 구호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환 강령상의 몰수 요구는 대중이 자신의 혁명 역량에만 의존할 것을 촉구하고, 몰수 문제를 노동자의 권력 장악 문제와 연결시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 시기에 전환 강령이 제기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한가? 레닌과 트로츠키는 모두 정치적 맥락이 뒷받

침될 때, 즉 혁명적 또는 혁명 전야적 맥락 속에서 전환적 요구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전환 강령이라면 현재 노동계급의 의식 수준이 가장 급진적인 수준에 가까워져 있거나, 노동계급이 일련의 투쟁 속에서 의식을 흔치 않은 속도로 빠르게 발전시킬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에 제출돼야 한다. 요컨대 전환 강령은 계급 세력관계가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한국의 계급세력 균형은 혁명적 혹은 반(半)혁명적 시기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노동자들이 일련의 투쟁 속에서 의식을 빠르게 발전시키는 상황이 아니다. 추진위도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가 실현되는 것이 현재의 계급 역관계에서 볼 때 매우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재벌 총수 지분 환수 및 국유화는 아예 입도 폐지 말자는 것인가? ... 우리는 계급 역관계가 어려운 조건에서도 반자본 사회화의 방향에서 비록 선전선동 수준을 넘지 못하지만, 재벌 총수 지분 환수 및 국유화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벌 몰수·국유화를 일반적인 수준에서 선전하는 것과 이를 구체적인 운동 쟁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전혀 다르다. 재벌 몰수 등을 선전하는 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지만, 정치적 맥락에 맞지 않게 제기되는 몰수나 국유화 요구는 노동자들을 당면한 현실 투쟁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는 데 일조할 수 있다.

고전에서 배운다

중간주의는 무엇인가?

트로츠키 1930년 5월 28일

〈노동자 연대〉편집자: 무릇 노동자 운동 안에서 활동하는 좌파는 크게 개혁주의, 혁명적 사회주의, 중간주의, 종파주의가 있다. 중간주의는 개혁주의와 혁명적 사회주의 사이에서 이리저리 유동적으로 옮겨다니는 불안정성과 동요, 표리부동, 망설임이 특징인 조류를 가리키는 레닌과 트로츠키의 용어이다. 이 글이 씌어지던 1930년에는 스탈린의 지령으로 코민테른과 각국 공산당이 중간주의적이면서도 종파적인 경향을 띠던 때였다. 한편, 일부 신디컬리스트들도 중간주의적 경향을 띠기 시작했다. 트로츠키는 이들의 우경화에 견제구를 날리고자 예리한 비판을 가하기로 했다. 이 글은 민주노총 내 일부 좌파가 최근 2년 새 우경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시사점을 던져 준다. 번역은 나와 차승일 기자가 함께 했다.

[급진적 노동조합 운동(신디컬리즘)을 지지하는] 신문 〈인민의 외침〉에서 상벨랑[모리스 상벨랑은 급진적 노동조합 운동가로, 1929년 9월 열린 통합노동조합총연맹 CGTU 제5차 대의원 대회에서 스탈린주의자들인 다수파에 맞서 소수인 신디컬리스트들의 논쟁을 주도했다는 교원노조의 “중간주의”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나는 그 편지 자체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혁명적 사상이 전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한 가지 논점만이 관심을 끈다. 상벨랑은 공산주의자들을 “중간주의자”라고 묘사한다. 그의 생각은 심중팔구 이런 것이다: 현재 정치 전선의 한쪽 끝에는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나트[등의 신디컬리스트] 등이 그들이다. 다른 쪽 끝에는 노동조합이 정당에 종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통합노동조합총연맹(CGTU)의 공식적인 지도자들이 그들이다. 이 둘 사이에 공산당 좌파(좌익반대파)가 있다는 것이다. [좌익반대파는]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주뽕주뽕 옹호하지만 공산당과 결별할 위험은 감수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좌익반대파가 중간주의자인 건中间的의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 좌익반대파가 중간주의[이 문맥에선 스탈린 일파를 가리킴]에 맞선 투쟁에서 등장했으므로 상벨랑은 [좌익반대파의] 내부 모순을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 상벨랑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는 듯하다.

자율성

자연주의자에게는 자연 세계의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마르크스주의자에게는 정치 세계와 관계된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상벨랑의 분류법은 피상적이지만, 덕분에 몇몇 혁명적 개념들을 정확하게 정의할 기회를 제공한다. [...]

의회 내 구도를 묘사하는 것인 양 ‘중간주의’를 평면기하학이나 위상기하학적으로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틀렸다. 마르크스주의자에게 정치적 개념들은

형식적 특징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방법론적 관점에서 고찰한 그 계급적 내용에 따라 규정된다. 현재의 노동자 운동 안에는 세 가지 경향이 있다. 개혁주의, 공산주의, 중간주의가 그것이다. 이 세 경향은 부르주아지의 제국주의적 체제 하에 있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객관적 조건에서 면부득 비롯한다.

개혁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 특권적 최상층에서 비롯해 그 계층의 이익을 반영한다. 특히 몇몇 나라 노동계의 귀족적 관료층은 특정 사고방식을 지닌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존재 조건과 사고방식이 프티부르주아적이다. 하지만 그들은 프롤레타리아에게 적응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의 지지로 성장한 계층이기 때문이다. 이 계층의 최상층 인사들은 부르주아 의회를 통해 고위 권력과 안락한 삶을 누린다.

[그들의] 개성은 프티부르주아적 사고방식이 일부 남아 있는 보수적 부르주아지와 비슷한데, 그 프티부르주아적 사고방식은 흔히 자신의 프롤레타리아 기반에 대한 위선적인 세계관의 모습을 취한다. 달리 말해, 그들은 세 가지 계급의 인격적 침전물이 되려 된 타입이다. 세 계급의 관계는 이렇다: 대부르주아지가 프티부르주아지에게 명령을 내리면 프티부르주아지는 노동자들에게 욕을 한다. 대부르주아지가 [개혁주의자들] 직원용 출입구를 통해 자신의 자택이나 은행장실이나 장관 집무실에서 만나 뵈느냐 아니면 [개혁주의자에게] 자신의 부와 사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았느냐 하는 것은 부차적이지만 하찮은 것은 아니다. 모순이 점점 더 심화하는 [자본주의] 진화의 제국주의적 단계에서 부르주아지는 개혁주의의 지도층을 자신의 기업과 정부 기관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일꾼으로 변모시켜야 한다. 이런 상황의 특징들은 개혁주의가 제국주의적 부르주아지에 새로, 훨씬 더 의존하게 되고, 개혁주의의 심리와 정치에 훨씬 더 독특한 각인이 남고, 개혁주의가 부르주아 국가의 국정을 직접 처리하기 적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최상층 ‘개혁주의자들’과 관련해, “그들이 잃을 것은 쇠사슬뿐이다” 하는 말은 결코 할 수 없다. 오히려 이들 총리, 장관, 시장, 국회의원, 노조 지도자들에게 사회주의 혁명은 그들의 특권적 지위를 빼앗는 일일 것이다. 이들 자본의 감시인들은 소유 **일반**을 지킬 뿐 아니라 주로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한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 해방 혁명을 철천지원수로 대한다.

개혁주의에 반대해 **혁명적이고 프롤레타리아적인 강령**(마르크스주의적 공산주의)에 근거한 우리는 이데올로기적이고 방법론적으로, 부르주아 국가의 혁명적 전복을 목표로 하는 체계적인 투쟁을 전망한다. 그 방법은 우선 프롤레타리아트를 단결시켜, 특히 권력 장악으로 나아가, 결국 사회를 사회주의적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가장 선진적인 소수, 즉 노동계급의 가장 의식적이고 대담한 소수만이 이



스페인 혁명 당시 중간주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 준 마르크스주의통일노동자당(POUM).

과업에 착수할 수 있다. 이 소수는 명확하게 규정되고 과학적으로 세워진 강령에 근거해 활동해야 하고, 노동자 투쟁 경험이 많아야 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목적으로 프롤레타리아의 다수를 더 많이 자기 주위에 집중시켜야 한다.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한, 프롤레타리아는 몹쓸 사상의 영향을 받으므로 당(이데올로기적 선택에 따라 건설된다)과 계급(생산 과정에 의해 자동으로 형성된다)의 구분은 사라질 수 없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승리한 뒤에야 비로소 — 계급이 일소돼, 특히 대중이 경제적·문화적으로 부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당은 노동 대중 속으로 조금씩 융해돼 마침내는 국가처럼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혁명적 미사여구나 늘어놓으며 허세를 부리는 불모의 종파들만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말하면서도 공산주의자 전위의 구실을 부정할 수 있다.

닭과 오리

이와 같이, 세계 노동계급 속에 존재하는 두 가지 **기본적** 경향은 사회적 제국주의[제국주의를 지지하는 ‘진보파’]와 혁명적 공산주의이다. 이 두 극 사이에는 끊임없이 모습이 바뀌고 항상 변모와 자리 이동을 하는 여러 **과도적** 단체들과 경향들이 있다. 이들은 때로 개혁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때로 공산주의에서 개혁주의로 변모하고 이동한다. 이들 **중간주의** 경향들은 사회적 기반이 명확하지 않고 원래 명확할 수도 없다. 개혁주의가 노동계급의 특권적 최상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산주의가 프롤레타리아의 기수 자체를 나타내는 반면, 중간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 내에서 일어나는 과도적 과정, 프롤레타리아 내 상이한 계층 내에서 일어나는 상이한 물결, 혁명적인 최종 입장을 향한 전진의 어려움을 나타낸다.

바로 이 때문에 중간주의 성향의 대

규모 조직은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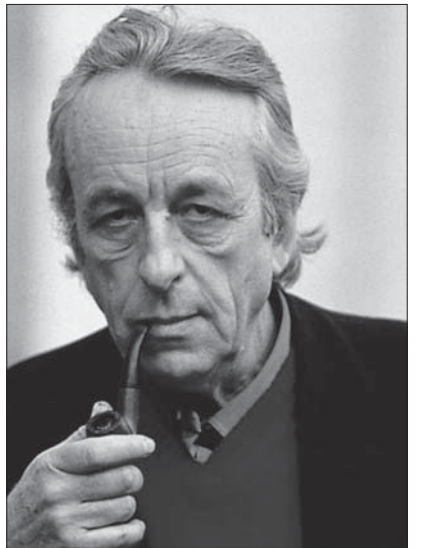
사실, 노동계급 안에는 개혁주의에 전면적으로 동의하고 싶어 하지도 않지만 기본적으로 혁명가가 될 수도 없는 변함없는 중간주의자들의 층이 항상 존재한다. [...] 대중으로 말하면 그들은 그런 과도적 단계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중간주의자들 주위에 결집했다가 오래잖아 공산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개혁주의자로 되돌아간다. 물론 일시적으로 정치적 무관심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프랑스 사회당 좌파가 공산당으로 변모했다. 그 과정에서 그 당의 중간주의적 지도자들은 버림받았다. 또한 이런 식으로 독일 독립사회민주당이 사라졌다. 그 과정에서 당원들은 공산당이나 사회민주당으로 갔다. 또 이런 식으로 ‘2.5 인터내셔널’이 세계에서 사라졌다.¹

이와 마찬가지로 현상을 노동조합 운동 영역에서도 볼 수 있다. 바로 영국의 중간주의적인 ‘독자적’ 노동조합들이다. 이 노동조합들은 국제노동조합연합(IFTU) 소속을 고수하다가 결국 총파업 때 배신을 자행한 IFTU의 비할 데 없는 ‘황색’ 정책 지지로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조직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중간주의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 공산당 관료들이 그렇게 주장하지만, 사실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중간주의에 매우 가깝다. 제1차세계대전 개전 직후 유럽 노동운동이 가라앉자, 명확한 대규모 조직과 조류들은 거품처럼 사라졌다. 세계의 위기가 현재 악화하고 있고 대중이 새로 급진화하고 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정당, 노동조합, 미조직 대중 속에서 새로 중간주의 경향들이 나타나는 것이 불가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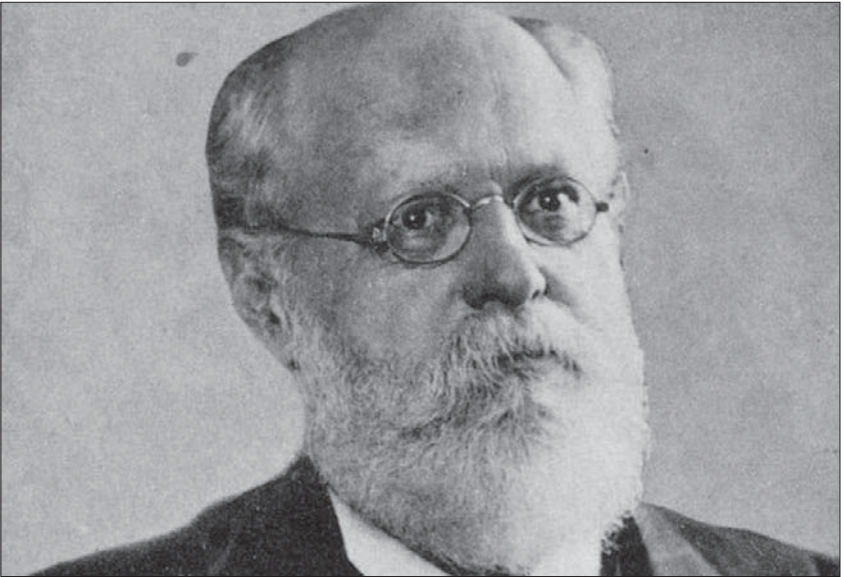
이렇게 새로 등장한 중간주의 경향



루이 알튀세르(1918~1990).

들 덕분에 옛 중간주의 지도자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현상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노동운동 내 중간주의 정치인들은 오리알을 품어 부화시킨 뒤에 [오리가 떠나자] 물가에 가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닭과 매우 비슷하다. 그 새끼들이 뻔뻔하게도 ‘자율적’ [어미] 닭을 떠나 개혁주의나 공산주의의 물에 들어가 헤엄치니 말이다. 상벨랑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주위를 돌아본다면, 지금 바쁘게 개혁주의적 알을 품고 있는 점잖은 닭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노동계 관료는 언제 어디서나 ‘자율성’이나 ‘독자성’ 등의 원칙으로 몸을 가리며 사실은 노동자로부터 자신의 독자성을 보장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이리저리한 원칙을 기치로 내세우는 관료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알다시피, 독일과 영국의 노동조합들은 오랫동안 모든 정당으로부터의 독자성을 주장했다. 오늘날 미국 노동조합들이 바로 이 점을 자랑으로 여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개혁주의는 결국 제국주의 편으로 붙었고, 이제부터는 개혁주의자들이 ‘자율성’이라는 표지를 예전처럼 쉽게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그



(위) 1919년 당시 독일 독립사회민주당(USPD)의 선거 포스터.

(아래) 사민당과 USPD의 지도자 칼 카우츠키(1854~1938).

표지를 고수하는 중간주의자들이 득을 볼 수 있다. 사실, 개혁주의나 공산주의와 비교해 우유부단이나 표리부동의 ‘자율성’을 소중하게 지키는 것이 중간주의자들의 본질 아닌가.²

바로 이런 식으로, 세계 노동운동 안에서 주로는 개혁주의의 속성이었던 자율 사상이 오늘날에는 중간주의의 표지가 됐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중간주의인가? 위에서 필자는 중간주의가 항상 위치를 바꾼다고 했다. 즉, 좌경화해 공산주의 쪽으로 올 수도 있고 우경화해 개혁주의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상벨랑이 그다지 오래지 않은 제1차 세계대전 개전 직후의 자기 단체 역사에 눈을 돌리기만 해도 그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자율적’ 노동조합들은 분명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즉 공산주의 쪽에서 개혁주의 쪽으로 가고 있다. 그 노동조합들은 심지어 공산주의라는 딱지도 거부했다. 바로 그 때

문에, 그 노동조합들은 좀 더 무질서하게 변모하는 다른 중간주의자들과 똑같은 진화 과정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중간주의가 왼쪽으로 움직이며 대중을 개혁주의에서 떼어놓는다면 진보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간주의의 이중성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니다. 그 진보적인 답도 조만간 자기 새끼들에게 버림받고 물가에서 통곡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중간주의가 자율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노동자들을 공산주의적 목표로부터 떼어놓아 개혁주의로 향하게 하려 한다면 더는 진보적이지 않고 오히려 반동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다. 현재 ‘노동조합독자성위원회’가 바로 그러한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말은 거의 다 바로 스탈린주의자들의 말이다” 하고 상벨랑은 말할 것이고, 전에 그렇게 쓴 적도 있다. 스탈린주의의 거짓말 정책에 맞서 상벨랑의 단체와 국제공산주의좌익반대파 가운데 누가 더 실질적이고 격렬

중간주의가 왼쪽으로 움직이며 대중을 개혁주의에서 떼어놓는다면 진보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중간주의가 자율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노동자들을 공산주의적 목표로부터 떼어놓아 개혁주의로 향하게 하려 한다면 더는 진보적이지 않고 오히려 반동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다.

한 투쟁을 벌이는지를 묻는 것은 부질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우리의 투쟁은 ‘자율주의자’들의 ‘투쟁’과 180도 정반대 방향을 향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노선을 고수하지만 상벨랑과 그의 동지들은 개혁주의 노선을 취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이 의식적으로 개혁주의 노선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결코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해 중간주의는 의식적인 정책이 없다. 의식적인 답이라면 오리알을 품어 부화시키겠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어떻게 당신은 상벨랑과 몽무소 [트로츠키의 이 글이 발표되던 당시 가스통 몽무소는 프랑스 공산당 중앙위원이자 통합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으로, 스탈린주의자였다] 같은 정반대 인물들을 중간주의라고 비판할 수 있는가?’ 하지만 중간주의의 본질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상벨랑과 몽무소를 모두 중간주의로 규정하는 것이 모순적이라고 느낄 것이다. 중간주의는 항상 바뀌고, 심지어는 거울을 코앞에 놓아 쥐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

지난 2년 새 공산당 공식 기구의 중간주의자들은 심하게 좌충우돌하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왔고, 모나트 [1926년 신디컬리스트동맹을 창립한 신디컬리스트]와 그의 동지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 공산주의인터내셔널(코민테른)과 적색노동조합인 터내셔널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풀어놓은 물결을 막으려고 맹목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급작스런 모험주의에 식겁한 상벨랑 류의 중간주의자들은 수평선에 나타나고 있는 새 물결을 거스르고자 허둥지둥 몸을 굽혔다. 그런 전환기에 두 흐름 가운데 먼저 물가로 쓸려오는 것은 중간주의 진영으로, 그 진영 안에서는 매우 이질적이고 상이한 방향을 향하는 운동들이 생겨난다. 상벨랑(이나 호되게 몰아세운다면 모나트)과 몽무소가 동전의 양면일 뿐이라는 것은 과연 참말이다.

여기서 나는 통합노동조합총연맹 CGTU와 공산당의 현 지도자들이 약 6년 전에 노동조합 문제를 어떻게 봤는지를 상기시켜야 한다고 본다. 사실 상 이미 그때 그들은 공산당의 공식 지도부였고, 소위 ‘트로츠키주의’에 맞

선 투쟁을 시작한 상황이었다. 1924년 1월에 열린 불쾌한 피투성이 노동조합 대회 후에 CGTU 지도자들은 공산당의 행동에 대한 책임 일체와 관련을 끊을 뿐 아니라 공산당 자체와도 관계를 끊으라는 압력을 받아 근엄한 어조로 ‘CGTU 선언’을 작성했다:

“통합노동조합총연맹의 자율성 문제와 마찬가지로 정당과 정파의 조직적·행정적 자율성 문제와 관련해, CGTU의 책임 있는 기구가 센강 지부와 공산당 청년단체가 독자적으로 주최한 집회에 대해 논의할 필요는 없었다. 외부 정당 정파 단체가 주최한 집회나 수행한 활동의 성격이 무엇이든지 간에 총연맹의 집행위원회와 사무국은 그 누구의 권한이라도 빼앗을 의도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외로부터의 공격 일체에 맞서 총연맹의 활동에 대한 통제력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그들은 알 것이다. …

“CGTU는 외부 단체, 그들의 강령, 그들의 목표를 검열할 권리도 권한도 없다. 그들 가운데 누구라도 막으려 든다면 CGTU는 경쟁하는 정당들 사이에서 누군가를 편파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자신의 필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셈이 될 것이다.

“몽무소, 세마르, 라카몽, 뒤딜리외, 베라르.”

이는 공산주의적 명확성과 혁명적 용기의 기념비에 영원히 남을 정말로 비할 데 없는 문서이다! 그리고 이 문서의 하단 부분에서 우리는 몽무소, 세마르, 라카몽, 뒤딜리외, 베라르의 서명을 볼 수 있다.

내 생각에 프랑스의 좌익반대파는 이 ‘선언’을 고스란히 출판할 뿐 아니라 마땅히 받을 만한 세간의 관심을 받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 미래에 무엇이 우리를 놀라게 할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영·소 노조위원회

몽무소와 세마르 등이 공산당 등 각종 정파에 대한 자신들의 절대적인 중립성을 공표한 이 ‘선언’에 서명하고 지난 몇 년 사이에 이 공산당계 지도자들은 용감하지만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꽤 많이 벌였다. 특히, 그들은 ‘영·소 노조위원회’의 정책을 영리하게 수행했다. 그 정책은 철저히 자율성이라는 허구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스탈린은 램프 맥도날드와 제임스 H 토머스의 정당[영국 노동당]을 토머스와 앨버트 A 퍼슬의 노동조합[영국 노총 TUC]과 완전 별개로 취급하라고 가르쳤다. 퍼슬[영국 노총과 영·소 노조위원회 내의 대표적 좌파 인사]의 도움을 받아 토머스가 공산당 중간주의자들을 당나귀로 만들어 버리자, 그 당나귀들은 창피해서 몸 둘 바를 모르게 됐다.

바로 얼마 전에만 해도 몽무소는 노동조합이 모든 정당과 정파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었다. 지금은 노동조합이 그저 정당의 그림자여야 한다며 노동조합을 종파로 만들고 싶어 한다! 현재의 몽무소, 즉 풍운 몽무소는 누구인가? 바로 과거에는 오줌 눈 몽무소이다. 그는 창피해 몸 둘 바를 몰라 마치 장갑 안팎 뒤집

듯이 휙 돌아누워 버렸다. 상벨랑은 누구지? 그는 풍운 몽무소에게 식겁하고 있지만 한때 오줌 눈 몽무소의 품에 안겨 있던 공산주의자였다.

이것이 한 종(種)의 두 변종 또는 한 혼동의 두 단계라는 점이 쉽게 눈에 띄지 않는가? 몽무소는 상벨랑이라는 허깨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겁주려 한다. 다른 한편, 상벨랑은 몽무소라는 허깨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겁주려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둘은 각각 거울을 보며 주먹을 뺏고 있는 것일 뿐이다. […]

허깨비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혁명의 강령에 따라 단결한 노동계급의 전위이다. 그런 조직은 프랑스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의 일부 인자들과 파편들이 있을 뿐이다. 누군가 노동자들에게 그런 조직이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노동계급만으로 충분하다고, 노동계급이 이제 성숙해서 계급의 전위가 이끌지 않아도 된다고 감히 단언한다면, 그는 혁명가가 아니라 저급한 아첨꾼이고, 프롤레타리아트의 품위를 지배자들에게 팔아넘기는 자이고, 감정적인 거짓 선동가이다. 현실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잘못된 짓이다. 노동자는 진실을 알아야 하고 진실을 사랑하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

만약 상벨랑이 공산주의자들은 ‘중간’에 있다고, 즉 몽무소와 자신 사이에 있다고 본다면 그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공산주의자들은 그 둘 모두의 위에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온갖 중간주의들의 위에 있고, 중간주의가 범하는 모든 오류의 위에 있다. 노동조합은 대중의 기관으로 변모될 수 있고, 진정으로 혁명적인 리더십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단, 이 문제들을 각각 철저히 살펴보는 노동계급 내 한 조류가 그런 리더십을 제공할 때만 그럴 수 있다. 그 조류는 계급과 계급의 혁명적 전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이해가 뾰족 깊이 스며들어 있는 조류이다. 이 근본적 문제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고, 짚고 넘어갈 여지도 전혀 없다.

그 어느 문제보다 바로 이 문제[당과 계급의 관계 문제]에서 명확성이 필요하다.

1. 독일 독립사회민주당(USPD)은 사회민주당에서 이탈한 중간주의 인사들이 1917년 창당했다. 당원의 다수는 1920년 독일 공산당에 가입했다. 소수는 25인테내셔널에 가맹한 독자 단체로 있다가 몇 명을 제외하고 1922년 사회민주당에 재가입했다. 25인테내셔널(사회주의 정당 인터내셔널 협회)은 혁명적 대중의 압력에 떠밀려 제2인테내셔널에서 이탈한 중간주의 정당과 단체들이 1921년 2월 창립했다. 25인테내셔널의 지도자들은 제2인테내셔널을 비판했지만 정치적 지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았다. 1923년 그들은 제2인테내셔널과 통합했다.

2. 1906~14년 프랑스 신디컬리즘 운동에서 ‘독자성’은 의회주의적 기회주의와 단절하는 것을 뜻했다. 이런 이유로, 즉 선천적으로 프랑스의 혁명적 신디컬리즘은 정당을 설립했어도 온전히 발전하지 못했고, 결국 제1차 세계대전 개전도 전에 쇠퇴했다.

격동하는 세계, 조금씩 전진하기 시작한 좌파들

오늘날 세계는 전쟁과 난민, 경제 위기와 저항으로 점철돼 있고 지난 몇 년 간 급진좌파와 극우파가 성장하는 등 정치적 양극화가 전개돼 왔다. 세계 격동의 최근 국면과 좌파들이 조금씩 전진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김중환** 기자가 유럽 사회주의자들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영국 혁명가들은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 좌파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지난 9월 영국 노동당 대표 선거에서 급진좌파인 제러미 코빈이 승리하는 이변이 연출됐다.

코빈은 긴축을 추진한 기존 노동당 노선을 비판하고 선명하게 긴축 반대를 천명했다. 그는 노동당 대표로 당선될 때까지도 영국 전쟁저지연합 의장이었고 여러 파업을 위한 연대를 건설하는 데 앞장섰 만큼 영국 급진좌파의 주요 인물이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SWP가 주축하는 맑스즘에서도 여러 차례 연설했다.

그는 급진적인 만큼 그동안 노동당 내각이나 노동당 의원단 등 공식 정치에서는 완전히 주변적인 인물이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코빈과 경쟁하는 노동당 우파뿐 아니라 온건한 노동당을 원하는 자유주의 언론 (가디언)과 (옵서버)도 코빈을 흡입내려고 갖은 악선전을 해왔다.

그럼에도 코빈은 크게 이겼다. 총 4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코빈 혼자서 60퍼센트를 득표할 만큼 그의 승리는 압도적이었다.

그동안 주류 언론은 시리자와 포테모스 같은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의 등장이 일부 남유럽 나라나 유럽 ‘주변부’ 나라에 국한된 현상이라고 떠들었다. 그러나 코빈의 당선은 유럽의 핵심 국가도 좌파적 개혁주의가 성장하는 전체 흐름에서 비켜서 있지 않음을 보여줬다.

다만, 영국에서는 노동당의 영향력을 뛰어넘는 별도의 급진적 흐름이 부재하고 혁명적 좌파가 노동당을 대신 할 대안을 건설하지 못하는 처지여서 그런 흐름이 노동당 안에서 부상했다.

코빈이 승리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그동안 노동당이 신자

유주의를 적극 수용한 것(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 노선)에 대한 누적된 반감이 노동당 당원 변화에 반영된 것이다.

지난 5년간 12만 명가량이 노동당에 입당 또는 제(再)입당했다. 대부분 과거에 노동당을 지지했던 나이 많은 옛 사회민주주의 지지자들로, 2000년대 초 노동당이 이라크 전쟁을 적극 지지하는 등의 모습을 보며당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다. 반면에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블레어를 따르는 후보가 5퍼센트도 못 얻는 초라한 성적을 거둔 것에서 보듯, 블레어 지지자들은 주변화됐다.

누적된 반감

둘째, 노동당의 당대표 선출 방식이 바뀌었다. 노동당 우파는 5년 전 대표 선거에서 노동조합 불복투표제(조합원수에 비례하는 표를 노조 지도부에게 주는 것) 때문에 패배한 것에 불만을 품었다. 그래서 이후 1인 1표제를 도입하고 ‘지지자’라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당대표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코빈은 제도 변화를 이용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금을 주고 지지자로 끌어들이 수 있었다.

셋째, 수많은 사람들이 코빈을 지지하며 노동당 지지자로 등록하는 흐름이 생겨난 것이다. 이전까지는 노동당

에 큰 관심을 두지 않던 청년들과 노동조합 활동가들, 인종차별 반대 운동과 긴축 반대 운동 참가자들이 특히 두드러졌다. 코빈의 선거 유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지역에서는 코빈의 선거 유세가 수십 년 만의 최대 좌파 집회가 됐다.



코빈의 당선은 유럽 핵심 국가에서도 좌파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35년 전 노동당 좌파 부상과의 차이

1970년대 말~1980년대 초에도 영국 노동당 좌파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부상한 적이 있었다. 당시 중심적 구실을 한 토니 벤의 이름을 따서 ‘벤 좌파 운동’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최근 코빈을 둘러싼 흐름은 벤 좌파 운동과 차이가 있다. 첫째, 당시 벤 좌파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혁명적 정치에서 멀어지는 우경적 흐름 속에서 노동당에 기대를 걸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코빈은 개혁주의에 대한 환멸 때문에 더 좌파적인 개혁주의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부상했다.

둘째, 벤 좌파 운동은 노동자 투쟁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하강하기 시작하던 때에 일어났다. 반면 최근 몇 년 동안 영국에서는 노동자 투쟁 수준이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강하는 국면은 아니었고, 오히려 경제 위기 이후 서서히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셋째, 벤 좌파 운동은 공식 노동운동과의 관계가 더 긴밀했다. 반면, 코빈은 노동당 안에서 워낙 주변적인 인물이므로 노동당 내 주요 기구를 활용하기가 더 어려운 처지다. 바로 이 때문에 노동

당 안팎의 여러 좌파들, 노동당 개혁주의에 깊이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코빈을 지지하고 나서고 있다. 예컨대 일부 좌파 노조는 코빈을 지지할 광범한 세력을 건설하기 위해 노동당 바깥의 SWP에게도 논의를 요청한다. 또한 좌파적 NGO들이 코빈을 지지하는 연대체를 꾸렸고, 노동당 내 기존 조직들도 코빈을 지지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다.

혁명가들은 이런 차이점을 감안해서 노동당 안에서 워낙 주변적인 인물이고 효과적으로 관계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둘째, 유럽 내 민족 갈등이 더 격화했다. 그전부터 유럽연합은 유로존 위기에 대한 대처를 놓고 분열했고 우크라이나 위기 때도 민족적 갈등이 불거졌다. 최근의 난민 문제는 그런 민족 갈등을 더욱 키우고 있고, 심지어 유럽 연합 회원국이 아닌 나라들에서도 그렇다. 유럽연합 바깥에 있는 세르비아는 접경지역에 있는 난민들에 대한 대응을 놓고 크로아티아와 격하게 충돌하고 있다. 그 두 나라가 주고 받는 연사의 혐악함은 과거 서로 전쟁을 벌인 1990년대를 떠올릴 만큼 심각하다.

진영 논리

한편, 난민 위기를 촉발한 주요 원인의 하나인 시리아 전쟁은 상황이 더 나빠졌다. 지난 4년간 이어진 아사드 정가 남진 교훈을 분석적으로 제시하며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영국으로 가는 길목인 프랑스 킬레에서 경찰들이 난민들을 가로막고 있다.

시리아 악화하는 내전과 난민 위기

유럽연합의 인종차별적 이민 정책은 전부터 위기를 겪고 있었다. 그러나 시리아의 끔찍한 상황 때문에 전보다 많은 시리아인들이 유럽으로 오면서 유럽연합의 이민 정책은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위기에 빠졌다.

최근의 난민 위기에서 두 가지 점이 두드러진다. 첫째, 난민들이 더 체계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터키에서 출발해 오스트리아와 독일로 향하는 난민들은 적어도 9월 초부터는 헝가리(그 경로의 중간에 있다) 정부가 자신들의 통행을 가로막는 것에 공공연하게 반기를 들었다.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해저 터널에서도 난민들이 적극적으로 영국 진입을 시도하면서 두 나라를 잇는 초고속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일도 벌어졌다. 최근의 난민 위기가 전에 비해 질적으로 달라졌음을 보여 주는 현상이다.

둘째, 유럽 내 민족 갈등이 더 격화했다. 그전부터 유럽연합은 유로존 위기에 대한 대처를 놓고 분열했고 우크라이나 위기 때도 민족적 갈등이 불거졌다. 최근의 난민 문제는 그런 민족 갈등을 더욱 키우고 있고, 심지어 유럽 연합 회원국이 아닌 나라들에서도 그렇다. 유럽연합 바깥에 있는 세르비아는 접경지역에 있는 난민들에 대한 대응을 놓고 크로아티아와 격하게 충돌하고 있다. 그 두 나라가 주고 받는 연사의 혐악함은 과거 서로 전쟁을 벌인 1990년대를 떠올릴 만큼 심각하다.

최근 독일의 좌파 일간지 <용에벨트>는 러시아의 시리아 개입을 비판한 독일 좌파당(디링케) 소속 국회의원이자 좌파당 내 의견결론 ‘마르크스21’ 소속인 크리스티네 부흐홀츠를 서방의 군사 개입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한데 묶어 비난했다. 부흐홀츠가 서방의 시리아 개입뿐 아니라 러시아의 개입도 비판하며 시리아 현지의 혁명만이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옹계 주장한 것을 왜곡한 것이다.

이런 왜곡은 러시아 개입 비판을 친서방적이고 친제국주의적인 주장으로 호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로 <용에벨트>는 러시아의 개입과 서방의 개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그런 주장을 폈다. 그 칼럼을 쓴 <용에벨트> 수석편집자는 동독 시절 약탈권의 학살,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이하이시스의) 등장, 1년 넘게 계

속되는 서방의 공습도 모자라서 최근에는 러시아의 공습까지 더해진 것이다. (러시아의 시리아 개입을 둘러싼 지정학적 분석에 대해서는 13면의 알렉스 켈리니코프 논평을 보시오.)

러시아의 시리아 개입은 그동안 혁명가들이 강대국의 개입 일체를 반대한 것이 옳았음을 보여 준다. 러시아의 폭격만으로도 전쟁은 더 격화했고, 무엇보다 러시아의 개입을 보며 서방이 개입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위험도 있다.

그런데 국제 좌파 사이에는 되려 러시아의 개입을 반기는 흐름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국제적으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패권을 휘두르는 것만을 문제로 보며, 따라서 러시아가 개입하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진영논리이다. 근본적으로는 러시아·중국 등을 진보적 국가로 보는 착각도 흔히 결합돼 있다.

이런 왜곡은 러시아 개입 비판을 친서방적이고 친제국주의적인 주장으로 호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로 <용에벨트>는 러시아의 개입과 서방의 개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그런 주장을 폈다. 그 칼럼을 쓴 <용에벨트> 수석편집자는 동독 시절 약탈권의 학살,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이하이시스의) 등장, 1년 넘게 계

전력이 드러나 대학 강사직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이 논쟁은 중요하다. 러시아 개입 전까지는 외세가 시리아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적어도 중립을 표방했던 스탈린주의자들이 이제는 개입 지지로 돌아서는 징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국제 반전 운동 안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레닌, 트로츠키 등 고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를 어느 한 열강만의 횡포로 여기지 않았고, 한 열강이 다른 열강을 견제하는 것에 기대를 걸지 않았다. 그 대신 제국주의를 열강들이 세계를 놓고 벌이는 경쟁 체제로 봤고, 그래서 노동계급 투쟁만이 제국주의를 끝장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이고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는 것을 틈타 세력을 회복하려는 러시아도 당연히 제국주의 국가이다.

진영논리의 패배는 영국에서도 나타난다. 한때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을 건설하는 주요 기구였던 전쟁저지연합이 지난 몇 년 간 이라크와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서 진영논리에 빠져들었다. 시리아 문제에서도 서방 개입만을 반대하며 아사드 정권을 비판한 길 꺼렸다. 최근 유럽 난민 위기 국면에서는 아사드의 살육을 파헤치는 시리아 난민들과 반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서방 세계와, 특히 미국의 동맹국 한국의 혁명가들은 서방의 시리아 개입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제국주의 열강 간의 패권을 넘겨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러시아의 개입에도 반대해야 한다.

그리스 시리자의 배신에도 대중의 급진화는 계속된다

그리스 상황은 많은 좌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시리자 정부가 국민투표 후 태도를 갑작스레 180도 바꿨는데도 어떻게 선거에서 이겼을까?

이 질문은 단지 그리스 좌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리스 반긴축 운동에 일체감을 느껴 온 좌파 단체들도 같은 질문을 놓고 씨름하고 있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그리스 연대 활동을 해온 단체가 치프라스에 대한 태도를 놓고 분열했고, 영국에서 무비판적으로 치프라스를 치켜세우던 ‘그리스 연대 운동’이 난처한 입장이 됐다. 그러나 아일랜드에서처럼 그리스 연대 활동 단체가 치프라스를 비판하며 그리스 민중연합에 공감해 함께 좌경화한 경우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시리자의 긴축 합의를 비판하며 탈당한 민중연합이 원내 진입에 실패한 것만 본다. 이런 분석에 따르면, 선거 결과는 “그리스 좌파 전체의 패배”이고, 그리스 민중은 “탈진”했고 “회망과 대안의 아우라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식의 비판만 남는다(〈참세상〉 원영수).

그러나 이런 분석은 일면적이고 성급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그리스 노동계급의 정서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과제도 제시하지 못한 다. 민중연합이 원내 진입에 실패

한 것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지가 선거 직후에 분석했듯이(157호 ‘그리스 총선 결과—시리자의 제집권, 그러나 좌파의 성장 가능성도 보여 주다’를 보라), 우파인 신민당, 좌파적 개혁주의 시리자, 사회당 같은 중도계 정당들, 극우인 황금새벽당 등 선거에 출마한 정당이 대부분 득표가 줄었다. 가권한 사람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각 정당의 상대적 득표율은 조금 바뀌었지만 크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먼저, 기권율이 높았던 이유를 살펴야 한다. 그리스 유권자들은 투표하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에서 일하고 또 거기서 살지만 선거구가 고향으로 돼 있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투표해야 한다. 지난 9월 총선은 오히려 들어서만 세 번째로 치러진 선거였다. 많은 사람들이 굳이 그런 수고를 하면서까지 투표해야 한다고 여기지 않았다. 정치적 실망감뿐 아니라 1년에 3번이나 여행을 할 만큼 급진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것도 작용했다.

시리자보다 왼쪽에 있는 좌파들로 표가 이동하는 변화도 있었다. 민중연합은 더 좌파적인 입장으로 15만여 표를 얻었고 혁명적 반자본주의 좌파연합 안타르시아도 득표가 늘었다.

시리자는 더는 좌파적 청중을 유인할 힘이 없는가?

많은 평론가들이 시리자가 더는 좌파적 청중을 끌어 모을 여력이 없다는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다. “시리자 내부에서 좌파는 멸종했다”는 식의 평가(〈참세상〉)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민중연합이 시리자에서 나갔다고 해서 시리자에는 더는 좌파가 없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많은 좌파들이 시리자 안에 있다. 기

충 활동가 수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치프라스보다 좌파적인 조직가 난민들과 반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서방 세계와, 특히 미국의 동맹국 한국의 혁명가들은 서방의 시리아 개입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제국주의 열강 간의 패권을 넘겨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러시아의 개입에도 반대해야 한다.

라스도 그를 구할 수는 없었다. 시리자 안에 여전히 좌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단지 선거 결과를 분석할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시리자 지지자들과 어떻게 관계 맺을지를 고려할 때도 중요하다. 민중연합이 원내 진입에 실패한 것을 보며 시리자에 남아 있는 좌파는 당분간 탈당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그래서 그리스의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인 사회주의노동자당(SEEK)은 인종차별 반대 운동과 긴축 반대 운동을 건설할 때 시리자 내 좌파적 경향들을 끌어들이려 한다. 다른 나라의 혁명가들도 그리스 연대 운동 단체들과 관계 맺을 때 시리자를 둘러싼 논쟁을 하면서도, 함께 운동을 건설하려 해야 한다.

▶ 12면으로 이어짐

▶ 11면에서 이어짐

선거 국면이 끝난 지금, 노동자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선거는 계급세력 균형을 반영하지만
예외해서 그런다. 그래서 혁명가들은
표 계산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 반긴축
노동자 투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볼 만
한 현실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제 상황이 그렇다. 위기
는 사라질 기미가 없고, 유럽연합도 치
프라스에게 긴축의 고삐를 늦춰줄 기미
가 없다. 시리아 정부는 긴축을 집행하
려면 노동자들을 매우 혹독하게 공격해
야한다. 이는 만만찮은 일일 것이다.

흔히 정권 출범 초기에는 정부에 힘
이 실리는 ‘허니문’ 기간이 있다. 하지
만 지금 그리스에서는 그런 시기가 매
우 짧거나 심지어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 오래지 않아 긴축 반대 투쟁이
궤도에 오를 것이다. 당장 공공부문노

총(ADEDY)의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공공부문노총은 병원 노동자, 교사, 지
방정부 공무원 등을 포괄하는 그리스
2대 노총이다.

공공부문노총은 10월 15일부터
31일 사이에 구제금융 합의 내용에 반
대하는 24시간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
다. 이 파업은 앞으로 벌어질 그리스
노동자 투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공공부문

다른 움직임도 있다. 항구는 시리자
가 긴축 정책을 관철시키는 데서 가장
일찍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부문이다.
항구 민영화 반대 운동이 광범하게 일
어나고 있고, 항만노조는 이미 1기 시
리자 정부 하에서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최근 새 정부를 구성할 때 해운과 항
만 업무를 관장하는 장관을 연임시킬
지 말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그 장
관은 치프라스보다 좌파적이고 올해
1월에는 공개적으로 항구 민영화에 반
대한 인물이다. 결국 그는 연임에 성공
했다. 비록 그는 전보다 좀 더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항구에서 저항
이 벌어질 가능성은 높다.

보건 노동자들도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스의 보건·의료 서비스는 상
황이 심각하다. 의사와 간호사가 크게
부족하다. 그래서 공공부문노총에 속
하는 보건노조는 공공부문 총파업에
도 동참하고 그 뒤 독자적으로 24시간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예산 증액과 인
력 충원이 그들의 핵심 요구이다.



총선 전부터 선거 후 긴축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노동자들
9월 5일 테살로니키 긴축 반대 시위.

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잠재력

난민 문제와 황금새벽당 재판도 중
요한 쟁점이다. 난민 위기에 대한 그리
스 대중의 반응을 보면, 그 정서가 여
전히 좌경적임을 알 수 있다. 만일 일
각의 일면적 비판론이 보듯이 그리스
좌파의 처지가 형편없다면, 파시스트
황금새벽당뿐 아니라 우파 신민당도
난민 위기를 이용해 인종차별적 공격
을 해댔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은 그러지 못
했다. 오히려 난민들에게 연대하는 정
서가 일반적이었고 난민에 대한 도움
의 손길이 각지에서 이어졌다. 터키에
인접한 도서 지역뿐 아니라 아테네에
서도, 독일로 향하는 길목인 마케도니
아-그리스 접경지역에서도 그랬다.

시리아 출신 그리스 이민자들(난민
이 아니라 전부터 그리스에 살던 시리

아 출신자들)은 지금 그리스-터키 국
경을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난민들이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
록 보장하라는 요구이고, 인종차별 반
대 운동을 키우는 데 아주 중요한 요구
이다.

한편, 황금새벽당 재판은 중요한 국
면으로 접어들었다. 지금까지는 재판
이 계속 지연됐고 증인으로 나서는 사
람도 없었다. 그러나 최근 황금새벽당
지지자에게 살해당한 반파시즘 운동
가 파블로스 피사스의 부모가 증인으
로 나섰다. 이 계기를 살려 황금새벽당
지도부를 수감하라고 요구하며 재판
부를 압박하는 것은 중요한 운동이다.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반대하는 투
쟁은 혁명가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넓
히는 면에서도 중요하다. SEK를 제

외한 그리스 좌파들은 오랫동안 이 쟁
점에 대해서 굵뜨게 대응했다. SEK
와 함께 안타르시아를 결성한 다른 혁
명적 좌파들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SEK는 시리자 열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에도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
(KEERFA)을 통해 선제적으로 운동
을 건설했다.

SEK는 이처럼 인종차별 반대 운동
에 꾸준히, 그리고 깊이 관여했으므로
다가올 투쟁에 개입하는 데서도 유리
한 위치에 있다. 덕분에, 난민 위기를
보며 좌파들이 너도나도 인종차별 문
제에 달려드는 지금, 다른 좌파들을 인
도하는 위치에 있다.

한편, 인종차별 반대 운동은 그리스
바깥의 혁명가들이 시리자 지지자들
과 연계를 맺는 데서도 중요할 수 있

다. 치프라스의 배신에 대해 ‘거봐, 우
리가 뭘했어’ 하며 으스대는 것이 아니
라, 최근의 난민 위기와 독일 등지에서
부상하는 인종차별적 우익에 맞서 함
께 투쟁을 건설하자고 적극 손을 내밀
어야 한다. 이것은 혁명가들이 전체 운
동에 기여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
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황금새벽당

혁명가들이 정치적 논쟁에 개입하
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스 좌파 중에는
황금새벽당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입
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번 선거 때 시리자를 탈당해
서 민중연합과 제휴해 선거에 출마한
전 국회의장 조이 콘스탄토풀루(민중
연합에 입당하지는 않았다)는 황금새

벽당 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의회 표결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금새벽
당 지도부를 수감하고 그들의 대중적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반파시즘 운동
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었다. 문제는
민중연합과 그 지지자들이 이런 문제
(일반적으로 말해, 파시스트에게 언론
자유를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대단치 않게 여긴다는 것이다.

SEK는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KEERFA를 통해 황금새벽당 의원들
을 수감하라고 요구하는 운동을 꾸준
히 건설했다. SEK마저 다른 좌파들처
럼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서는 운동
을 소홀히 여겼더라면 황금새벽당은
시리자의 배신을 이용해 지금보다 더
크게 성장했을 것이다.

시리자 왼쪽의 좌파는 어디로

이렇듯 그리스에서는 긴축반대 운
동과 함께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반대
하는 운동이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
할 것이다. 이 운동에 관여하는 것은
시리자 왼쪽 좌파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이 문제에서 민중연합은 어떤지 먼
저 살펴보자. 민중연합은 좌파적 개혁
주의 정당이다. 그들은 시리자와 조직
적으로는 결별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결별하지 않았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민중연합은 시
리자에서 탈당한 의원들과 명망가들
을 내세워 당을 출범시켰고, 안타르시
아가 선거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한
것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지금 그들은
선거 성적이 초라해 의기소침해 있다.
민중연합은 몇몇 의원들과 명망가들
에게 의존한 덕분에 큰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지만, 더는 그런 이점을 누리지
못하므로 더 어려운 처지가 됐다. 지금
민중연합의 대부분의 정파와 당원들
은 지역위원회 구성이나 당 내부 구조
정비에 몰두하고 있다 충분한 준비 없
이 갑작스레 선거를 치른 것이 문제였
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중연합
은 안타르시아와 관계 맺는 데에는 큰
관심이 없다.

이처럼 민중연합은 사기저하돼 있

고, 조직을 추스려야 하고, 전에 누렸
던 명망이 없어, 긴축 반대 투쟁과 관
계 맺는 데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
다. 과거 브라질 노동자당(PT)에서 탈
당하며 기대를 모았던 사회주의와자
유당(P-SOL)이 그랬듯이 민중연합은
더 성장하기보다는 더 작은 세력으로
위축될 수도 있다.

한편, 안타르시아는 선거를 앞두고
소속 단체 두 곳이 민중연합으로 갔는
데도 득표가 늘었다. 그 덕분에 앞으
로 긴축 반대 운동과 인종차별 반대 운
동에서 전보다 더 많은 소임을 맡아야
한다는 정서가 있다. 그러나 안타르시
아 안에서도 논쟁이 있다. ‘안타르시아
가 너무 협소하게 극좌파들만 모은 것
아니냐, ‘개혁주의 단체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여전히
있다. 그런 주장을 가장 강하게 펴던
단체들이 민중연합으로 갔지만, 안타
르시아에서 가장 큰 단체인 신좌파경
향(NAR)에도 비슷한 입장의 활동가
들이 있다.

SEK는 안타르시아가 응집력 있고
발 빠르게 사태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도 논쟁을 해야 한다. 선거 결과
를 보면, SEK가 전보다 더 나은 조건
에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을 듯하다.

그리스에서는 전환강령이 필요하다

그리스에서 노동자 운동이 부상하
더라도 제대로 된 대안과 결합되지
못하면 커다란 난관에 부딪힐 수 있
다.

치프라스와 주류 정치권은 긴축 말
고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한다. 많
은 노동자들은 이런 주장을 거둬 거
부해 왔다.

민중연합이나 전 재무장관 바루파
키스 같은 시리자 탈당파는 유로화는
버릴 수 있지만(유로존 탈퇴), 유럽연
합 안에서 유럽연합을 개혁해야 한다
는 입장이다. 바루파키스와 콘스탄토
풀루 등은 프랑스 좌파전선의 장-뤽
멜랑송, 독일 좌파당의 오스카 라폰
텐 등과 함께 이런 대안을 국제적 수
준에서 제기할 ‘플랜B’ 대회를 건설
하려 한다.

이런 대안은 치프라스가 긴축에 굴
복한 것이 유로화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올바른 관측에서 출발한
다. 그래서 시리자보다 더 왼쪽으로
이동한 것이고, 치프라스를 좌파적으
로 비판케 하는 구실을 한다는 점에
서 긍정적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대
안에 관심을 보이는 청중들은 시리자
보다 더 왼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EU는 제국주의 연합” 여름 그리스 공공부문 파업 노동자들.

따라서 혁명가들은 이들의 대안이
왼쪽으로 진일보한 것이라고 반기면
서 그들과 관계 맺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플랜B’ 주창자들의 전망과
달리, 유로존 탈퇴를 유럽연합 개혁
을 위한 지렛대로 삼자는 대안은 현
재의 위기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유로존 탈
퇴는 그리스와 유럽의 자본가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과정의 일환
이어야 하고, 따라서 신자유주의 기
구인 유럽연합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
다. 현재 위기의 심각성 때문에 유로
존 유럽연합 탈퇴 주장은 체제와 부
분적으로만 단절하는 요구들, 즉 은

행과 주요 산업 국유화와 노동자 통
제 같은 요구와도 결합돼야 한다.

만일 2기 시리자 정부 하에서 노동
자들이 투쟁에 나서지 않으면 이런
대안 제시는 부질없는 일이 될 것이
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노동자들
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할 아
주 현실적인 근거들이 있다. 따라서
혁명가들은 노동자들이 좌파 정부에
맞서 싸울 때 반자본주의적인 지향을
갖고서 투쟁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걸
돕기 위해 전환강령을 제출해야 하
고, 이를 놓고 안타르시아 활동가들
은 물론 좌파적 개혁주의자들과도 우
호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시리아를 폭격하는 또 다른 제국주의 — 러시아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개입은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줬다. 시리아의 운명은 점점 더 외부 열강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점 말이다.

시리아 내전은 2011년에 일어난 진정한 대중 혁명에서 시작했다. 더 정확히 말해, 튀니지·이집트 혁명에 뒤이어 시리아에서도 대중 반란이 일어났고,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은 대중 반란으로부터 자신을 구하려고 종파적 내전을 시작했다.

이 전략은 먹었지만 대가는 컸다. 아사드는 (지금까지는) 연명하고 있고 정권을 보존하고 있다. 하지만 나라의 많은 부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 하페즈 알 아사드(1971~2000년 시리아 대통령을 역임했다)는 매우 악독한 짓을 하면서까지 외세, 즉 강대국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로부터 시리아의 독립을 지키려 분투했다. [그런데 그것이 어그러지고 있다.]

이제 강대국들이 시리아로 들어왔다. 미국은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를 폭격한다. 러시아는 다양한 아사드 반대 진영을 노골적으로 공격한다. 터키·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는 시리아 내 여러 수니파 전사들을 후원한다. 이란과 그 동맹인 레바논의 시아파 운동 헤즈볼라는 아사드의 뒤를 받친다. 지금 시리아 동부의 많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아이시스조차 근본적으로는 이라크 세력이다.

이렇게 시리아가 해체돼 있다는 사실이 내전 지속의 주요 원인이다. 서로 경쟁하는 외부 강대국들은 각자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느라 정신이 없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사드 정권을 제거할 것이냐 보존할 것이냐이다. 강대국들은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 말고는 전쟁을 끝내

는 데 관심이 없다.

일부 좌파는 러시아의 시리아 개입에 동조한다. 이런 태도는 특이한 형태의 맹목성을 보여 준다. 그런 관점은 서방만을 제국주의로 여기기 때문에 러시아가 나름의 경제적·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하는 제국주의 열강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지금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아사드의 군사적 힘이 약해지고 있어서 시리아 개입을 결정한 듯하다. 아사드가 무너지면 러시아는 중동의 주요 동맹을 잃게 된다. 그러면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이유로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하는데 쓸 유용한 협상 카드 하나를 잃게 된다.

비행금지구역

러시아는 강력한 대공미사일 S-300 64기를 탑재한 순양함 모스크바 호와 전투기를 시리아로 보냈다. 이 때문에 아사드에 대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려면 서방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푸틴은 2011년 나토가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알 카다피에 맞서 리비아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을 용인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했다. [카다피 이후 리비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인디펜던트〉의 패트릭 코번은 러시아의 시리아 개입을 정교하게 옹호했다. “전체로 보아, 러시아가 옆에 비껴 서 있기보다는 시리아에 깊숙이 개입하는 편이 더 낫다. … 그러면 아사드가 시리아 권좌에 계속 앉아 있게 되겠지만, 러시아의 힘 때문에 아사드는 행동 방식을 바꿀 것이고, 폭력이 줄어들고 총성이 멈추고 권력이 지역으로 분산되는 방향으로 사태가 흐를 것이다.”

아사드를 떠받치면 미국과 그 동맹들이 시리아 분할 구상에 찬성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가 그 구상에 관심이 있다는 징후는 어디에도 없다.

오바마는 러시아가 폭격을 시작한 뒤 우려스러운 발언을 했다. “우리는 시리아에서 러시아와 대리전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시리아 개입에 있어서] 전략적 악수(惡手)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략적 악수? 핵을 보유한 초강대국 둘이 시리아에서 서로 군사행동을 벌이는 것은 전략적 고려를 떠나 그 자체로 근본적으로 위험한 일 아닐까? [전략이 바뀌면 대리전도 감수할 수 있다는 여지를 오바마가 남겨 뒀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오바마는 아이시스를 어떻게 다룰지 전략이 없다고 시인하는 유명한 말을 했다. 오바마의 처지는 여전하다. 폭격을 한다고 아이시스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모두가 안다. 미국 국방부는 “온건한” 시리아 반군을 효과적 전투부대로 변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훈련 및 장비 제공”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9월 말 이 계획이 일부 보류됐다. 훈련 참가자가 무기와 차량을 알카에다의 시리아 가맹 조직인 자바트 알 누스라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리아를 분할한다는 구상의 가장 근본적인 결함은 현재 아이시스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설령 미국과 다른 열강들이 협상에 나선다 한들, 아이시스가 그에 협조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미국이든 (마찬가지로 공군에 의존하는) 러시아든 아이시스를 군사적으로 격퇴할 전망이 높은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끔찍한 아비규환은 계속될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474호 / 번역 차승일

독일 좌파당 국회의원의게 듣는다 난민 사태와 지배계급의 위선

독일의 사회주의자 의원이자 좌파당(디링케) 당원인 크리스티네 부흐홀츠가 독일의 난민 사태를 말한다.

지난 몇 주간 난민들이 독일에 새로 들어오자 평범한 사람들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메우기 위해 모였다.

좌파당 당원들은 그 일부였다. 우리는 난민을 맞이했고, 여러 지역에서 난민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제대로 된 집과 음식을 제공하려는 계획을 지원했다

나는 난민들의 용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장벽을 힘으로 무너뜨렸다. 우리는 난민들에게 국경을 개방하고 집과 미래를 제공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주택 건축 계획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난민들이 친척과 친지들 가까이에서 살 수 있다.

독일 동부의 작센에서는 나치와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난민들의 집과 경찰을 공격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그러므로 좌파당이 정부에 조치를 취라고 요구한 것은 매우 중요했다.

‘요새 유럽’

총리 앙겔라 메르켈을 압박한 것도 효과가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독일로 들어올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요새 유럽’ 정책이 입은 중요한 타격이었다.

9월 13일 일요일 내무부 장관은 오스트리아와 독일 간 출입국 관리 정책을 재정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표는 난민들이 전쟁의 희생자가 아니라 침략자라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허언에 힘을 실어 줬다.

나는 난민들과 동행해 오스트리아에서 독일로 왔다. 오스트리아 빈의 주요 기차역에는 많은 난민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혼란스러워하고, 화내고, 두려워했다. 우리는 함께 독일 국경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면 난민 등록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독일이 난민 유입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것이 전혀 아니다. 예컨대 핀란드는 부자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걷어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사용했다. 독일 정부는 군사비에 엄청난 돈을 쓴다.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있다. 돈이나 수용력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만난 난민들은 시리

아 출신자들이었다. 그들은 지중해를 건넌고, 그리스의 섬에 있는 수용시설에 갇혔고, 발칸 반도를 가로질렀고, 헝가리에서 구금되는 과정을 거쳐 왔고, 독일에서 안전한 곳을 찾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스나 헝가리에서 펼쳐진 상황은 확실히 우리가 원하는 유럽의 모습이 아니다.

일부 지배계급은 고급 노동력과 청년에 대한 수요가 있으므로 난민 유입으로 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을 계기로 임금을 낮출 수 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다른 지배계급들은 난민이 안보를 위협한다며 인종 문제를 제기한다.

지배계급은 노동자들이 서로 대립하게 만들려고 애쓴다. 독일 보육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제 지방정부들은 이렇게 말한다. “유감이지만 보육 노동자에게 줄 돈이 더는 없다. 난민에게 돈을 써야 한다.”

매우 비열한 수작이다. 경제에 얼마나 ‘쓸모’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난민들은 전쟁과 불의를 피해 왔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

10~15년 전 독일 정부는 노동시장과 연금을 개혁하는 등 긴축을 시작했다. 그 덕에 독일 자본들은 유럽 위기로부터 이익을 봤지만, 독일 노동계급은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 같은 여러 문제를 겪었다.

공공 부채를 모두 위헌인 것으로 만드는 ‘재정 건전화’ 정책에 공공 지출이 억제되고 있다.

난민 등록과 주택 건설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가 감축된 것이 한 요인이다. 즉, 난민 ‘위기’는 어느 정도 긴축 탓에 생긴 일이다.

지난해 무슬림과 이민자를 혐오하는 조직인 페기다는 대규모 거리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대항 시위를 촉발하기도 했다.

이제 페기다는 다시 행진을 시작했다. 얼마 전 페기다는 드레스덴에서 5천 명을 거리 시위에 동원했다. 그리고 AfD(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뜻의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는 내부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작센에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국내·국제 차원에서 인종차별에 맞선 투쟁과 부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파가 자신들의 해법을 내놓을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5년 10월호
번역 이진화

시리자의 재집권과 노동자 저항의 전망

시리자는 9월 20일 조기 총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했다. 이 글은 총선 직후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이 발표한 성명서의 축약본을 번역한 것이다. [] 안의 말은 옮긴이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덧붙인 말이다.

그리스의 새 연립정부는 전보다 취약해진 상황에서 출발하게 됐다. 반면 노동자들의 저항은 더 강해진 좌파적 야당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을 저지할 가능성은 전보다 더 커졌다.

시리자는 약 30만 표를 잃었다. 그중 적어도 절반은 [시리자] 왼쪽으로 이동했다. 많은 유권자들은 기권을 선택했다. 가령,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치러지는 선거에 투표하러 자기 주소지로 가기에는 형편이 녹록하지 않은 실업자와 가난한 유권자들이 있다. [올해 그리스에서는 1월 25일에 총선, 7월 5일에 국민투표가 치러졌고, 이번 총선이 세 번째 선거이다.]

시리자 내부 위기는 민중연합의 이탈로

끝나지 않았다. 또한 노동계급 출신의 시리자 기층 당원들은 우파 정당 신민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시리자 대표 알렉시스 치프라스의] 협박 때문에 시리자에 투표했지만, 시리자의 공약에 대한 그들의 환상은 줄어들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두 가지 주장을 하며 선거운동을 벌였다. 새 양해각서를 수용한 것은 일시적 선택이다. 양해각서 합의를 강요한 자들에게 계속 맞서겠다.

유럽연합이 이데올로기적으로 파산했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분명해지고 있다. 중도정당들과 “중도좌파” 정당들 중 누구도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지 못했다.

민중연합은 15만 표를 얻었다. 이와 함께 공산당, 반자본주의 좌파연합 안타르시아 등 좌파 정당들의 득표율은 모두 합쳐 9.46퍼센트이다.

시리자 같은 좌파 정당이 집권한 상황에서 그 바깥의 좌파 정당들이 이만한 득표를 했다는 것은 인상적인 일이다. 좌파가 이 정도로 득표하는 나라는 없다.

새 양해각서에 따라 공격을 받게 될 작업장들이 저항의 거점으로 바뀔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파시스트의 성장에 맞서고 난민과 이민자들을 방어하는 투쟁의 전망도 비슷하다.

안타르시아는 모든 수준의 노동자 저항이 발전하는 데 분명히 일조할 수 있는 세력이 되겠다며 총선에 출마했다.

국내외 지배계급과 그 기구들의 위협에 직면한 정부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서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은 이제 현실적인 것이 됐다. 수많은 노동계급 투사와 좌파들이 그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자본주의 전략이 내놓는 답변이 유용할 것이다. 안타르시아와 같은 반자본주의 좌파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은 노동계급 저항의 다음 물결을 승리의 물결로 만들기 위해 헌신할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5년 10월호 / 번역 최재필

세계경제 장기 침체

자본주의는 장기적인 이윤율 저하의 늪에 빠져 있다

정선영

2008년 9월 대불황이 시작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세계경제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30년대 이래 처음으로 주요 나라들에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우려가 실질적이라는 사실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세계 수출입 물량을 보더라도 세계경제의 침체 상황을 알 수 있다. 위기 전인 2000~07년에는 세계 수출입 물량이 연평균 7.2퍼센트 늘었지만 2008~14년에는 3.1퍼센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올해 1분기에는 1.5퍼센트, 2분기에는 0.5퍼센트 감소했다(전분기 대비).

그래서 이미 2008년 위기를 세계 대불황이라고 규정했던 마르크스주의자들뿐 아니라 오바마의 최고 경제자문이었던 로런스 서머스나 폴 크루그먼과 같은 경제학자들도 현재 상황을 “장기 침체”로 규정하고 있다. “장기 침체”는 1930년대 케인스 지지자들이 처음 썼던 용어이다.

그동안 주요 국가의 정부들은 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며 경기를 부양하려 애썼고, 대규모 기업 지원책을 폈다. 그런데도 위기는 해결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부채는 늘어나며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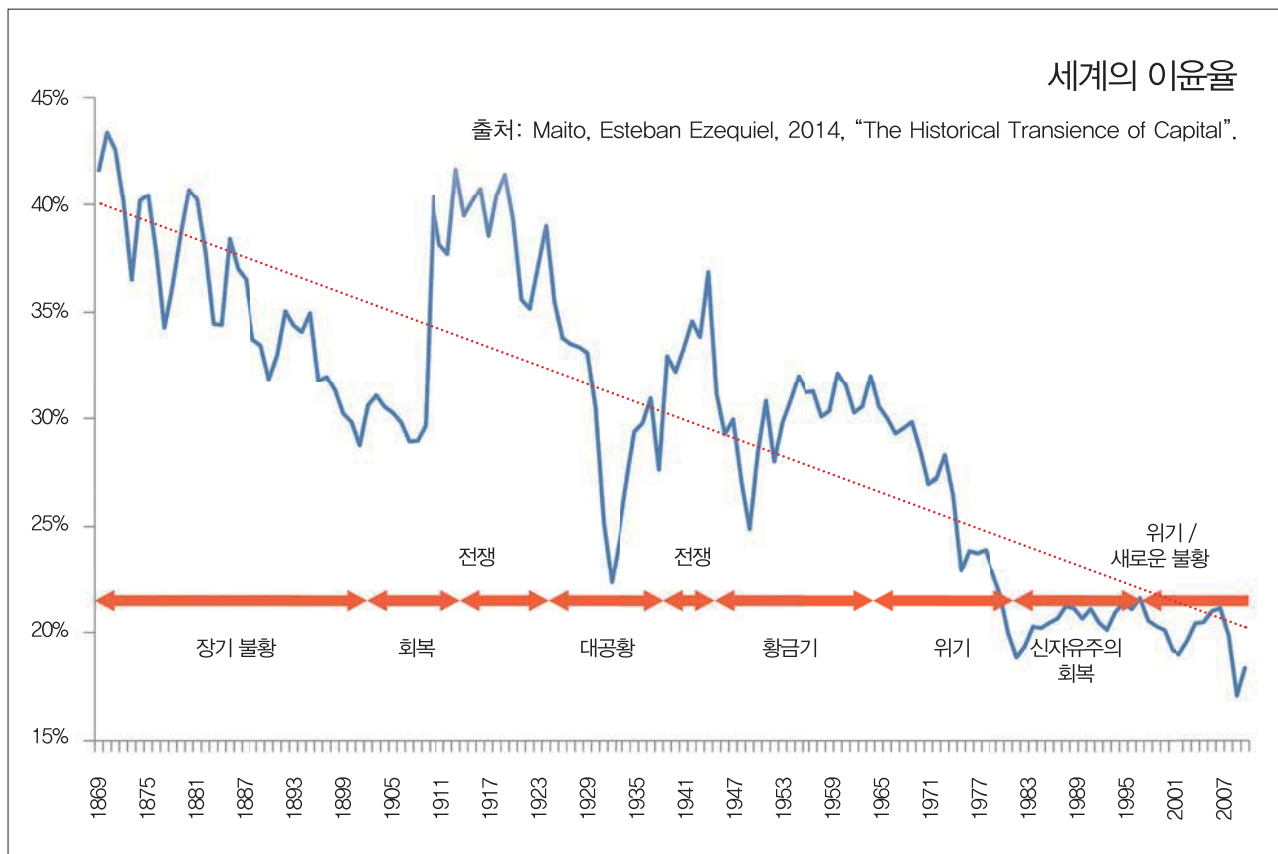
2008년 시작된 공황이 이토록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이 위기가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세계 자본주의의 이윤율이 그전보다 낮아졌고, 그 이후로 위기가 장기적으로 누적돼 왔다.

이윤율 저하

많은 연구 결과는 이윤율이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하락했음을 보여 준다. 물론 이윤율은 측정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다양한 학자들이 다소 상이한 방식으로 계산했더라도 이윤율의 하락 추세는 발견할 수 있다.[그래프]

마르크스는 이윤율이 저하하는 핵심 요인으로 “죽은 노동”(기계설비류)이 “산 노동”(노동자)을 점차 대체하는 경향을 지적했다. 이를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라고 말한다. 자본가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가치를 창출하는 근원인 노동력의 상대적 비중이 점차 줄어든다. 그래서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이윤은 늘지 못해 이윤율이 떨어진다.

이 과정은 현실에서도 볼 수 있다. 미국 제조업에서 노동자 대비 자본 투자의 비율은 1957~68년과 1968~73년 사이에 40퍼센트 이상 급증했다. 앤드루 클라이먼도 “자본의 기술적 그리고 유기적 구성들은 지



난 60년 동안 거의 지속적으로, 그리고 매우 급격히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1947~2009년의 연간 성장률은 1.7퍼센트였다.”(《자본주의 생산의 실패》, 206쪽)

이렇게 자본가들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기계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이윤율을 떨어뜨려 위기를 낳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자본주의 생산의 진정한 장벽은 자본 자체”라고 마르크스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보여 준다. 자본주의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외부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의 동역학 때문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장기 호황 때 자본주의는 지속적 군비 지출 덕분에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잉여가치의 상당 부분이 군비로 쓰이면서 다시 생산적 투자로 투입되는 비율이 줄었고, 그 때문에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속도가 늦춰진 덕분이다.

그러나 미국은 독일이나 일본처럼 군비 부담이 적은 국가들과 경쟁해야 했고 이 때문에 1960년대 말쯤에는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 양이 다시 증가하면서 이윤율이 떨어졌다.

물론 이윤율 저하를 상쇄하는 요소들도 있으므로 자본주의는 단선적으로 위기로 빠져드는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 상쇄 경향을 지적했다.

첫째, 노동자들을 더 많이 쥐어짜 더

많은 가치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착취율을 높이기 위해 자본가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노동자들을 공격해 왔다. 지금도 그런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둘째, 단기적 위기로 일부 기업가들이 망하고, 그 기업의 기계 등을 다른 기업이 값싸게 사들이는 것이다. 이런 “위기를 통한 자본의 파괴”가 이윤율 회복의 핵심 요소이다.

실제로 이윤율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일부 회복됐다. 노동자들의 임금에 억제돼 전제 국민 소득에서 총 이윤의 몫이 늘어난 것이 한 이유이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부터 1990년대 말까지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노동시간이 대폭 늘었다. 유럽에서는 미국만큼 실질임금이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나라에서 노동시간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일부 대자본가들은 다른 자본가들의 파산에서 득을 볼 수 있었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때 30대 재벌 그룹 중 절반이 쓰러졌고, 남은 자본을 다른 재벌이나 외국 자본이 헐값에 인수하며 득을 봤듯이 말이다. 영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장 셋 중 하나가 문을 닫았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붕괴하는 심각한 위기를 겪은 것은 서방 자본들이 이 지역 기업들을 헐값에 인수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착취 증대와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이윤율은 과거 수준의 절반 이상으로 회복되지 못했다. 프레드 모즐리의 계산 결과를 보면, 이윤율은 “초기 하락의 40퍼센트 정도만 … 회복됐다.” 뒤메닐과 레비는 “1997년의 이윤율”이 “1948년 수준의 절반 정도였고 1956~1965년의 10년간 평균치의 60~75퍼센트였다”고 주장

했다.《좀비 자본주의》, 크리스 하먼, 259쪽) 앤드루 클라이먼은 1980년대에 이윤율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통계를 내기도 했다.

이는 이윤율을 회복시키는 요소들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저항 때문에 자본가들은 원하는 만큼 착취를 증대시키기 쉽지 않다. 게다가 자본 파괴를 통한 이윤율 회복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그 효과를 내기 힘들어진다. 점점 소수의 기업이 큰 부를 차지하는 자본의 집적과 집중 경향 때문에 한 기업의 몰락은 경제 전체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1930년대 같은 기업 파산과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했는데, 이는 모순된 효과를 냈다. 국가의 개입은 최악의 붕괴를 막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이윤율이 충분히 회복하는 것도 막는다.

그래서 세계 자본주의는 1970년대 이후 더 자주 반복되는 위기를 겪어 왔다. 1차 석유파동으로 불렀던 1973~74년 위기에 이어 1979~82년에는 2차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는 두 번째 심각한 침체에 빠졌다. 1990~91년에도 미국의 성장률이 추락하는 등 위기가 엄습했다. 1991년 시작된 금융 위기로 일본은 장기 침체에 빠졌고 1997년에는 동아시아가, 1998년에는 브라질과 러시아가 심각한 위기에 시달렸다. 2001~02년에는 아르헨티나 등 라틴아메리카가 심각한 위기에 시달렸다.

이런 위기가 벌어질 때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각각의 특수한 원인 때문에 위기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석유파동 때는 석유 생산국들의 담합과 유가 인상이 도마에 올랐고, 1997년 동아시아 위기 때는 정경유착과 부패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석유 가격 인상은 이윤율 하락으로 허덕이던

이 위기는

노쇠한 자본주의가 처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위기이다. 위기는 앞으로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체제 전체가 회복하려면 엄청난 파괴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을 무너뜨린 결정타였을 뿐이다. 1997년 신흥공업국들이 겪었던 위기도 세계적으로 낮은 이윤율 때문에 생산과 소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경쟁을 벌였던 국가들이 처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였다.

지난 수십 년간 금융부문이 커지고 2008년 공황이 금융 거품 붕괴라는 형태로 터진 배경에도 실물경제의 낮은 이윤율이 자리잡고 있었다. 1970년대 이후의 이윤율이 장기 호황기보다 낮은 상황에서 생산과 축적의 상승률은 둔화했다. 기업들은 투자해서 이윤을 벌어들일 것이라는 확신이 적은 상황에서 생산적 투자에 돈을 쓰기보다는 저축을 하는 방법을 택했다. 미국의 경우, 산업 생산의 10년 성장률은 1957~73년에 평균 57퍼센트였지만, 1975~2008년에는 30퍼센트로 급락했다(《자본주의 생산의 실패》, 앤드루 클라이먼).

금융화

이렇게 투자되지 않는 돈이 채권, 주식, 부동산 등으로 흘러 들어가 금융거래가 매우 활발해졌다. 또 이 돈은 실질임금이 감소하거나 정제해서 소비 여력이 충분치 않았던 사람들이 빚을 통해 소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데 사용됐다. 자본가들은 노동계급에게 빚을 내서 소비하라고 부추겼고, 이를 통해 수요를 부양해 자본주의 경제가 이력저력 돌아갈 수 있었다.

특히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고 기업과 가계가 부채를 늘리는 것을 장려해 경기를 부양하려 했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중반에 미국과 영국 증권시장이 크게 성장했고, 1980년대 말에는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1990년대 말에는 닷컴 호황이 나타났고, 2000년대 초중반에는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는 사이에 정부, 비금융 기업, 소비자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부채 수준이 높아졌다. 폴 크루그먼이 말했듯 “거품을 또 다른 거품으로 대체한 역사”가 이어졌다.

이윤율

투자한 돈에 대해 벌어들인 총이윤의 비율이다. 이윤율 위해 경쟁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에서 이윤율은 자본가들이 생산을 확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윤율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자극제이며 축적의 조건이고 추진력”이라고 했다.

이렇게 금융 투기를 통한 성장은 한 동안 경제가 상승 국면에 들어섰다는 환상을 불러일으켰지만 금융 위기가 닥치자 그 환상이 착각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실물부문에서 잉여가치 생산이 둔화한 상황에서 금융 거품이 무한정 유지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2008년 공황 이후 각국 지배계급은 그전 시기에 한 일을 더 큰 규모로 반복했다고 할 수 있다.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하고, 기업들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펴며 세금은 깎아 주고,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는 삭감했다. 모두 기업들의 이윤율을 올려 주기 위한 정책들이었다.

일부 기업들은 파산했지만 더 많은 기업의 파산을 막기 위해 정부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

그 결과 낮은 이윤율의 문제는 그대로인 채 부채는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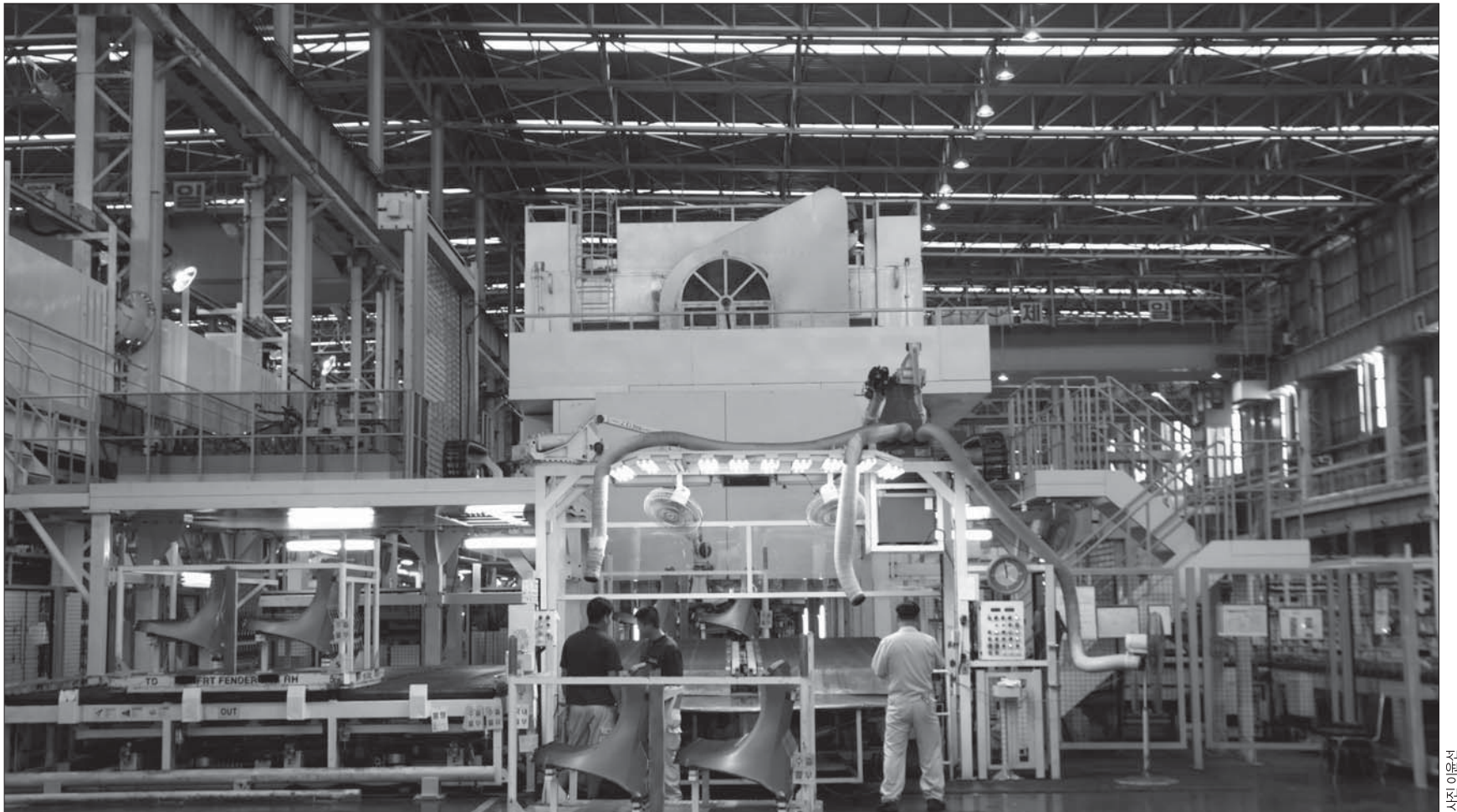
전 세계 부채 규모는 2001년 국내총생산(GDP)의 1백60퍼센트, 2009년 2백 퍼센트에 이어 2013년 말 2백15퍼센트로 급증했다.(영국 경제정책연구센터와 스위스 국제통화금융연구센터가 2014년 9월 발간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 '제네바 리포트') 특히 신흥국들의 부채 비율이 더욱 빠르게 늘고 있다. JP모건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신흥국의 GDP 대비 기업·가계 부채 비율은 2007년 73퍼센트에서 2014년 말 1백6퍼센트로 33퍼센트 늘었다.

반면 낮은 이윤율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에 따르면 최근 미국·영국·일본·중국·독일 등 주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업 이윤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2013년에는 약 11퍼센트였던 이윤율이 2014년 말에는 3.2퍼센트로 떨어졌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저하와 함께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 위기는 노쇠한 자본주의가 처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위기이다. 위기는 앞으로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착취 강화와 구조조정 효과로 체제의 일부는 성장할 수도 있지만, 체제 전체가 회복려면 엄청난 파괴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그 대가를 노동자들이 치르게 하기 위해 임금 삭감과 해고, 복지 삭감 등을 추진하고, 전쟁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공격에 맞서 노동계급과 억압받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노쇠해지는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한 대안을 찾으려 골몰할 것이 아니라, 체제를 거부하고 노동계급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대안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이런 대안은 계급 투쟁을 더욱 일관되게 건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윤을 위한 경쟁 때문에 기계설비류의 비중이 산 노동자에 비해 점점 더 커지고, 이는 이윤을 저하로 이어진다.

이윤율 하락으로 위기를 설명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2008년 위기 전 몇 년간 이윤율이 상승 추세였다는 점을 들어 2008년 위기의 원인이 낮은 이윤율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뢰베닐·레비는 바로 그 이유로 2008년 위기를 이윤율의 위기가 아니라 “금융 헤게모니”의 위기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우선 뢰베닐·레비가 이윤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있다. 뢰베닐·레비는 기계와 같은 고정자본만을 이윤율의 분모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유동자본(물류비용이나 각종 금융비용 등)이 이윤율의 분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윤율이 실제보다 크게 계산된다. 총 투자 대비 이윤으로 이윤율을 계산하면 2008년

위기 전 시기의 이윤율은 뢰베닐·레비가 계산한 것만큼 상승하지 않는다.

게다가 경제위기의 원인을 위기 직전의 이윤율의 추세로 판단해 이윤율이 하락하는 추세였으면 이윤율 저하가 원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 협소한 시각이다.

내재적 원인

이윤율이 낮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이윤을 회복하기 위해 빚을 늘려 일시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금융 투기가 조장될 수도 있다. 그러다가 벌어들이는 이윤으로는 빚을 갚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을 깨닫는 상황에서 위

기로 빠져들 수 있다. 또 정부의 부양책도 공황이 바로 터지는 것을 지연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업들이 이윤율이 낮은 상태를 어느 정도 버티다가 더는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위기로 터질 수 있다.

따라서 이윤율 저하로 경제위기가 바로 터진다고 보기보다는 이윤율 저하가 위기를 낳는 내재적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한다. 마르크스도 “이윤율 저하는 신규 독립자본의 형성을 누리게 하고 자본주의 생산 과정의 발달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윤율 저하는 과잉 생산, 투기, 그리고 위기를 촉진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본론 제3권》

금융화가 이윤율을 상승시켰나

금융화가 이윤율 상승을 이끌었다는 주장은 한국의 좌파들도 흔히 하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홍석만(참세상 편집국장)은 노동자가 지급하는 이자가 늘어나는 것을 통해 이윤율이 상승한다고 본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축적체제’는 이자 발생을 위한 ‘부채화’가 그 핵심에 있고, 이를 통해 자본가들은 이윤율 개선을 도모했다고 본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코스타스 라파비차스는 은행이 소비자를 “직접 착취”하는 것이 잉여가치 창출의 새로운 원천이 됐고 체제의 동역학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비슷한 듯하다.

좌파노동자회가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금융수탈체제”라고 규정하는 데도 이자를 통한 수탈이 자본가들이 잉여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지적했듯이 은행 자본가들이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보조하고 “이자, 수수료 등의 형태로 이윤을 얻었다면 이 이윤은 산업, 상업 자본가들이 뽑아낸 잉여가

치의 재분배로 봐야 한다.” 노동자들이 내는 이자는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일부인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금융자본가에게 이자를 내는 것을 통해 잉여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자는 생산과정에서 만들어진 가치가 이전된 것이다.

금융 수탈을 통해 잉여가치가 창출된다고 보면 노동자들뿐 아니라 빚을 진 자본가계급이나 신중간계급도 은행가들에게 착취당하는 것이 된다. 이런 개념은 노동계급이 받는 진정한 착취를 흐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금융세계화론

윤소영 교수의 금융세계화론은 금융의 이윤율이 전체 이윤율을 끌어올려서 1980년대부터 이윤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한다. 윤소영 교수는 “인수·합병과 지주회사로의 변모”를 통해 “고정자본의 급증을 통해서 이윤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금융화”라고 본다. 특히 제너럴 모터스가 대우자동차를 인

수·합병한 것과 같은 초국가적 금융화를 통해 금융의 이윤율이 상승했다고 본다.

그러나 인수·합병을 통해 자본가가 이윤량을 늘릴 수는 있을지라도 이윤율을 올릴 수는 없다. 인수·합병이 새로운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인수·합병 과정에서 자본을 할값에 인수한다면 이를 통해 이윤율이 오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불변자본의 가치를 떨어뜨려 얻는 효과라고 말해야지, 인수·합병이 낳은 효과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인수·합병을 통해 한 자본가가 특별히 이득을 보면 다른 자본가는 손해를 본 것이므로 체제 전체의 이윤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수는 없다.

1980년대 이윤율이 일시적으로 올랐던 것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착취 증가와 기업 파산과 합병으로 인한 구조조정 효과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금융부문의 이윤율 상승은 실물경제의 이윤율 상승이 이전된 것으로 봐야 한다.

온라인 기사를

읽어보세요

★ 《사회변혁적 노동조합: 20세기 초 유럽과 미국의 신디컬리즘》 서평
노동조합과 사회 변혁 정치는 어떤 관계인가?

★ 이산가족 상봉
박근혜에겐 “노동개혁” 추진에 따른 불만 달래기의 일부

★ 여성 억압을 설명하기 위해
가부장제 이론이 필요한가?

★ 폭스바겐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사기극
**이윤을 위해서라면 꿈수도
마다하지 않는 체제의 추악한
단면**

★ 그리스 반파시즘 운동이
황금새벽당의 부활 시도에 맞서다

★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망언’을 사과하고, 콜트·콜텍은
부당해고 철회하라**

★ 쌍용차 투쟁 승리를 위한 범국민대회
**쌍용차 투쟁에 지지와 연대가
건재함을 보여 주다**

★ 노사 아합 항의 투쟁에 나선
집배원 노동자들
**“공공사업 적자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토요 근무 부활
반대한다”**

★ 나는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됐는가
세상을 기억하는 방식

★ 나는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됐는가
나는 왜 노동자연대에 가입했는가

www.
wspaper.
org

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①

스웨덴 복지국가는 건재한가?

장호중

[편집자 주]총선을 반년 앞두고 진보진영과 노동운동 안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복지국가 모델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진보진영 내에서는 ‘스웨덴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는데 <노동자 연대>는 앞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스웨덴 모델의 역사와 현재를 살펴보는 기사를 연재할 예정이다. 이번 연재가 오늘날 한국 노동계급에게 필요한 교훈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 ① 스웨덴 복지국가는 건재한가?
- ② 스웨덴 모델 1- 살쥬바덴 협약과 계급타협 전략
- ③ 스웨덴 모델 2 - 연대임금정책과 렌-마이드너 모델 : 누가 이익을 얻었나?
- ④ 스웨덴 모델 3 - 임노동자기금 : 살아있는 호랑이의 발톱을 하나씩 뽑을 수 있을까?
- ⑤ 스웨덴 사민당 - 누구의 정당인가?

넉넉한 노령연금, 보육비 지원과 별도로 지급되는 아동수당, 최장 3백 일 동안 임금의 80퍼센트를 지급하는 실업수당(자녀가 있을 경우 4백50일), 주 5일 근로제에 더해 연간 5주의 유급휴가, 임금의 90퍼센트를 보장하는 관대한 유급 병가, 질병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벌충하는 상병수당, 4백80일의 유급 출산 휴가, 자녀 1명당 연간 1백20일의 자녀병상휴가, 무상교육과 사실상 무상의료(연간 진료비 상한선 50만 원), 가족이 병을 앓을 경우 지급되는 가족간병수당, 기타 등등.

오늘날 한국 사회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처럼 관대한 스웨덴의 복지 제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스웨덴 관련 서적이 쏟아져 나오고 진보진영 내에서 ‘스웨덴 모델’이 주목받는 핵심 이유다.

1990년대에 스웨덴이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으며 복지가 대폭 삭감되자, 특히 주요 선진국 정부들은 ‘복지병’이 스웨덴 경제 위기를 낳았으며 자국에서 시행하는 복지 삭감과 신자유주의 정책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스웨덴이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높은 경제 성장율을 기록한다는 점은 복지와 성장이 반비례 관계가 아님을 보여 주는 반증 사례가 되고 있다. 일부 개혁주의 지식인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분배를 통한 성장론’ 혹은 ‘소득 주도 성장론’ 등을 경제 위기의 대안으로 제시한다.(마르크스 주의자들이 노동계급의 처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소득 주도 성장론’에 비판적인 까닭에 대해서는 <노동자 연대> 131호에 실린 ‘소득 주도 성장론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 ‘전후 장기호황이 소득 주도 성장 덕분이었는가?’를 보시오.)

성장과 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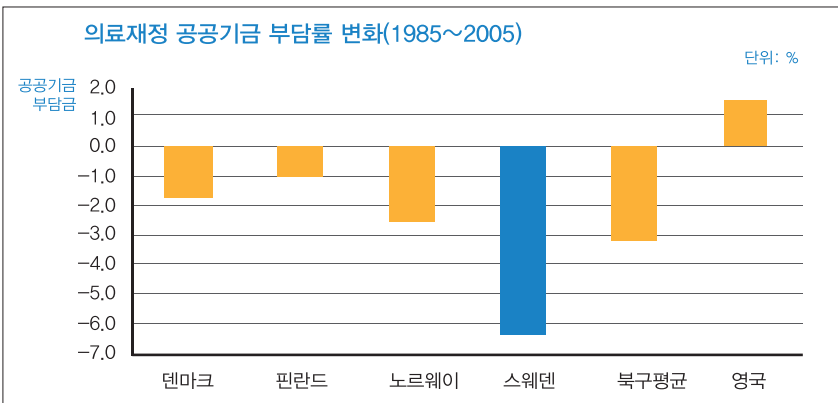
스웨덴은 심지어 2008년 이후 세계 경제 위기 속에도 높은 경제 성장율을 유지하고 1990년대에 삭감된 복지 혜택을 일부 회복시켰다. 그러자 스웨덴은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붙잡은 모델로 인기는 더욱 높아졌다.

그런데 국내 일부 개혁주의 지식인들은 스웨덴 복지 제도를 소개하고 운동의 요구로 제시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스웨덴 사민당의 정책 일반을 오늘날 한국의 진보진영이 따라야 할 ‘모델’로 삼자고 제안한다. 복지 제도가 한 나라의 재정 정책이나 조세 제도, 노동 정책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복지 제도만 따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연대 임금 정책 등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스웨덴 모델’에 대해서는 다음 연재 기사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특히 계급투쟁보다는 개혁주의 정당의 집권을 사회 개혁의 주요 동력으로 여기는 온건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1970년대와 1990년대 스웨덴에서 시행된 대대적인 복지 삭감에 대해 비판을 아낀다. “당시 정치, 경제, 인구 등의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 근본적 후퇴로 비판하는 건 적절치 않



2013년 스톡홀름에서 벌어진 이민자 소요 사태는 복지의 낙원으로 알려진 스웨덴 사회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스웨덴은 OECD 나라들 중 불평등이 가장 빠르게 커지고 있다.

다.”(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그러다 보니, 스웨덴에서 우파가 집권해 시행한 복지 ‘개혁’도 비판하기 어려워 한다. 일부 지식인들은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각종 제도의 ‘경로 의존성’ 때문에 우파 정부라도 이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우파 정부 하에서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복지 혜택의 수준이 수시로 조정되었을 뿐... 실질적인 복지제도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신광영 중앙대학교 교수)

물론 스웨덴 복지국가의 후퇴를 ‘근본적 후퇴’라 말하기는 어렵다. 다른 선진국들에 견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애당초 스웨덴 복지국가가 여타의 자본주의 국가와 근본에서 다른 사회였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전성기인 전후 20년은 영국 등 다른 유럽 복지국가들의 전성기이기도 했다. 심지어 당시에는 미국에서조차 복지 지출이 늘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가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는 국가자본주의적 성장 전략을 추구했고 복지 지출을 늘리면서도 꾸준히 성장을 이어갔다.

또 개혁주의 정치인들이나 국가 관료의 입장이 아니라 **평범한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보면** “변화는 거의 없었다”는 평가는 지나치게 관대하다. 1960~70년대 스웨덴 노동자들의 처지와

1990~2010년대 스웨덴 노동자들의 처지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심지어 전후 스웨덴 모델의 입안자로 평가되는 루돌프 마이드너조차 1998년에 한 인터뷰에서 “오늘날 스웨덴 모델은 그 목표나 응용 모두에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일부 개혁주의 지식인들은 스웨덴 정부의 복지 지출 규모가 크게 줄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논거로 삼아 스웨덴 복지국가가 건재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똑같은 돈을 쓰면서도 얼마나 복지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지는 미국의 의료 체계가 잘 보여 주고 있다. 게다가 스웨덴은 지난 20년 사이에 복지 지출 규모가 줄어든 몇 안 되는 나라들 중 하나다. 스웨덴 정부의 복지 지출 규모는 1990년대 세계 1위에서 현재 5위로 떨어졌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부의 복지 삭감 노력에도 실업 때문에 복지 지출 총량은 오히려 늘어 왔다.)

노르웨이 노동운동가인 아스비에른 발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현실에 대해 이렇게 지적한다. “우리가 유람선의 꼭대기층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지금 그 유람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것이다.” OECD는 201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스웨덴을 세계에서 소득불평등이 가장 빠르게 커지는 나라라고 지목했다.

스웨덴의 복지 제도가 실제로 후퇴

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단지 “개량주의”라는 낙인을 찍기 위한 트집 잡기가 아니다. 오건호나 신광영 류의 관점이 노동자들이 자신의 조건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데에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복지 축소에 맞선 스웨덴 노동자들의 저항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비록 지금은 그 저항이 주로 선거를 통해 수동적으로 표현되는 수준이지만 말이다.

스웨덴 사민당은 1980년대에 추진한 민영화와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1991년 선거에서 패배했고 2006년과 2010년 선거에서도 패배했다. 2014년 선거에서 재집권에 성공했지만 득표는 역대 최악의 참패를 기록한 2010년에 비해 고작 0.3퍼센트(의석 수로는 1석) 늘어나는 데 그쳤다. 1990~2000년대에 사민당을 비판하면서도 연정에 참가해 ‘꼬마 사민당’이라 비판받아 온 좌파당조차 이번에는 정부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파 정당들이 잃은 표는 대부분 파시스트 정당인 민주당이 가져가 최초로 원내 3당의 지위에 올랐다(12.86퍼센트). 스웨덴은 2011년 현재 이민자 비율이 27퍼센트나 되는데, 이들에 대한 차별이 강화돼 2013년에는 스톡홀름에서 소요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민당은 물론이고 우파 정당들의 복지 삭감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스웨덴의 노동자들에게는 저항하지 말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또 다른 해악은 결국 경제 위기 상황에서 복지와 노동조건 후퇴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국내 지배자들의 공격에 문을 열어 주는 효과를 낸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이 스스로 투쟁을 통해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 정당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노동자들을 수동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사실 이 점이야말로 스웨덴 노동자들 뿐 아니라 유럽의 노동자들이 반세기 가까이 겪은 커다란 난점이었다.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자신의 지지 기반인 조직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당연히 곳곳에서 저항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주류 개혁주의 정당과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투쟁을 배신하거나 자기제한적 전술로 패배를 자초하면서 노동자 투쟁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정치

적 대안 건설도 힘을 얻기 어렵다.

반면, 지난 10년 사이에 계급투쟁 수준이 가장 높았던 그리스에서는 시리자라는 좌파 개혁주의 정당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었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그 시리자조차 배신하는 것을 보며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섰지만 말이다.

다음 호에서는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성을 자랑하던 스웨덴의 노동조합이 왜 이처럼 무기력해졌는지 살펴볼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스웨덴의 복지 후퇴

공공서비스 민영화

1988년 세계 최초의 철도 수직분할(시설유지업무 분리). 항공(1992), 통신(1993), 전화와 체신(1993), 전기(1996) 민영화. 국영기업 70개 가운데 35개를 민영화. 방위산업체, 제약회사, 철강, 에너지, 가스, 물 등 거의 전 부문에 걸친 민영화.

연금개혁

소득비례연금은 전액 고용주가 부담하던 것을 노동자들도 보험료로 임금의 9.25퍼센트를 내도록 했다. 기초연금도 전액 고용주 부담이던 것을 조세로 부담하기로 했다.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으로 1980년 말에는 10퍼센트 정도이던 민간 연금 보험 가입 비율이 최근 20퍼센트 정도로 늘었다.

실업수당

사민당이 실업수당의 임금 대체율을 85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낮춘 데 이어 2007년 보수연정은 이를 65퍼센트 수준으로 낮췄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대기기간을 5일에서 7일로 늘렸고, 2005년 13.5퍼센트였던 노동자들의 실업보험 부담 비율을 30퍼센트로 인상했다. 물가상승율에 연동해서 지급하던 자녀수당과 실업수당은 물가상승율보다 낮게 증가하도록 책정됐다. 2006년 이후 병가수당의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돼 외상이나 암 등 '검증 가능한' 환자만 질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인 간병

노인 간병은 스웨덴 공공부문의 중심적인 영역이었지만 1992년 보수당 정부는 외부 민간 기관에게 외주화하거나 민간 기관이 직접 담당하도록 했다. 또 의료재정 부담을 줄인다면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라 간병인들이 담당하는 사회서비스로 바꿨다. 그 결과 병상은 크게 줄어 1988년에 인구 1천 명당 병상이 12개였던 것이 1998년에는 4개로 줄어들었다. 사설기관의 전체 간병인력은 꾸준히 줄고 있다.

의료

1984년에 사적 의료보험이 도입돼 2014년 현재 전체 의료비 중에서 사적으로 부담하는 의료비는 19퍼센트를 차지한다. 1985년에서 2005년 사이에 스

웨덴의 의료비 중 공공기금 의존율은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낮아졌다. 1971년 전면 국유화된 약국은 2006년에 다시 민영화됐다. 보수당은 1991년 사립병원 설립을 허용해 현재 1차 의료기관의 25퍼센트가량이 민간의료기관이다. 사민당이 1994년에 이를 금지했지만 이 사립병원들은 남아 있다. 1994년의 의료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의사의 30퍼센트 이상이 줄어들었다. 2008년 이후 다시 고용을 늘리려 했지만 인력 양성 기간이 길어 현재 환자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2000년의 통계를 보면 안과 환자의 80퍼센트가 3달 이상을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교육

1988년 사민당이 사립학교 설립을 허용한 데 이어 보수연정은 학교 재정의 15퍼센트를 등록금으로 걷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조세

1991년과 1994년 조세 개혁으로 노동소득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자본소득에는 비례세율을 적용했다. 간접세를 대폭 인상했다(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23.46퍼센트). 이는 1969년에 도입한 고용주세 등 자본가들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1969년 이전의 조세제도도 “진보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GNP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 21퍼센트에서 1975년 41퍼센트로 크게 늘었지만 조세액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12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감소했다. 2004년 사민당 페르손 정부는 상속세, 증여세, 부유세도 폐지했다.

〈참고자료〉

최연혁 외,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 스웨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양재진 외, 《복지국가의 조세와 정치》, 집문당, 2015
신광영,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한울 아카데미, 2015
신정완, 《복지자본주의나 민주적 사회주의나 - 임노동자기능논쟁과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사평 아카데미, 2012
아스비에른 발,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부글북스, 2012 등



최규진 인문학 전공자

언제부턴가 서점가에 진화심리학과 관련된 책이 즐비하다. 진화심리학에 기대 칼럼들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그런 글들을 읽고 있으면 그럴싸해 보인다. 답답한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속에서 '여성은, 남성은, 혹은 인간은 진화상 원래 그렇다'는 얘기를 들으면 왠지 모를 위안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싸한 것과 정말 그런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경우 남성 중심적 사고나 체제 옹호적 사고를 용인할 수 있기에 더더욱 비판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진화심리학 옹호자들도 내치는 조야한 예들은 차치하고, 우선 진화심리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데이비드 버스(David M. Buss)의 제자, 전중환의 설명을 들어보자.

그는 성추행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여성과 일시적 성관계를 맺으려는 (남성의) 욕망이 여성의 의도를 잘못 해석”(한겨레, 2013)하기 때문이며, 이는 “수백만 년 전 여성의 성적 의도를 실제보다 과대평가했던 남성들이 우리의 조상이 되었”고, “이들이 여성의 성적 의도를 있는 그대로 추론했던 남성들보다 생존과 번식에 더 유리했기 때문”(동아일보, 2010)이라고 설명한다. 이렇듯 “진화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오랜 진화의 역사를 거치면서 여러 유형의 ‘적응 문제들’에 직면했었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설계된 마음을 가진 개체만이 진화적으로 성공했을 것이라고 믿는다.”(장대익, 2003)

자연선택

물론 진화심리학자들이 늘 강조하듯이 모든 마음이 다 이런 적응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진 않는다. 그러나 적응의 결과물이 많건 적건 간에, 이러한 주장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과학적으로 두 가지가 입증돼야 한다.

우선 마음(혹은 본성)이 진화의 결과물이 되려면 마음이란 것이 생물학적으로 다음 세대에 전달돼야 한다. 때문에 진화심리학자들은 마음

을 ‘정신기관’(mental organ)이라고 부르며 특수화된 입·출력 체계인 모듈(module) 구조로 돼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뇌에 구조화된 모듈이라는 장치가 있고 바로 여기에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된 무수한 본능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지점은 《이기적 유전자》에서 도킨스가 ‘밈’이라는 장치를 가정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과 동일하다.) 진화심리학자 사이에서 모듈의 구조와 규모에 따라 의견이 나뉘긴 하지만 어떤 이름으로 불리건 간에 분명한 것은 이런 구조 혹은 장치들이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다는 점이다.

진화심리학을 받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론적 토대는 “인간의 마음은, 오랜 수렵·채집기 동안 우리 조상들에게 끊임없이 부과됐던 적응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자연선택에 의해 설계된 계산 기관들의 체계”라는 핑커(S. Pinker)의 말에 잘 나와 있다. 마음이 자연선택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진화의 결과물로 마음을 보게 되면 적어도 모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은 현대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 심지어 진화심리학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모듈은 농업이 발명된 1만 년 전의 환경과도 상관이 없다. 1만 년은 진화가 이루어지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다. 다시 말해, 인류 진화과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십 수백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이, 환경에 적응하며 자연선택된 마음이 바로 현재의 인간이 보여 주는 본성의 기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 수십 수백만 년 전 인류의 조상과 그들이 마주친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아는 바는 거의 없다. 데이비드 벌러(David Buller)가 지적했듯이, 우리는 “사람 속(屬)에 있는 종(種)들이 영위한 생활 방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고사하고, 그 종들의 숫자조차 알지 못한다.”

그나마 진화심리학자들이 실증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현재 존재하는 수렵채취 집단을 통한 인류학적 고찰일 것이다. 하지만 많은 인류학적 고찰들은 현대까지 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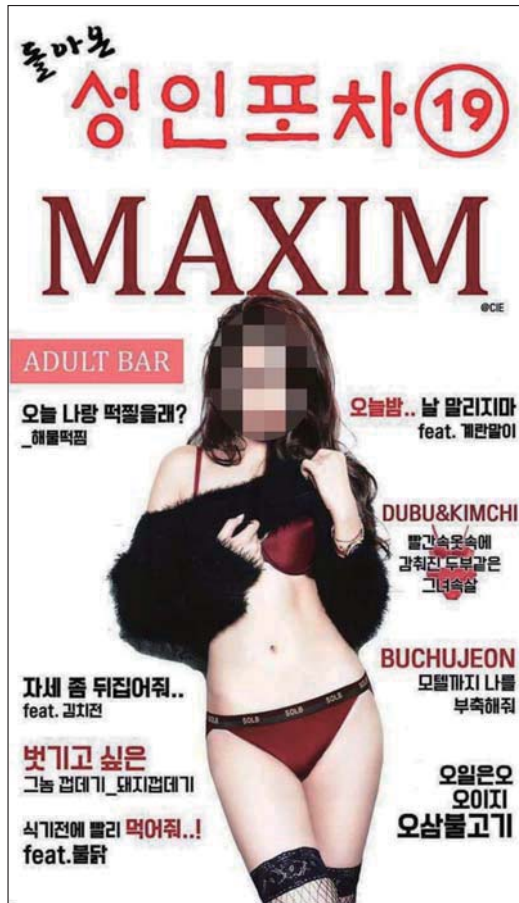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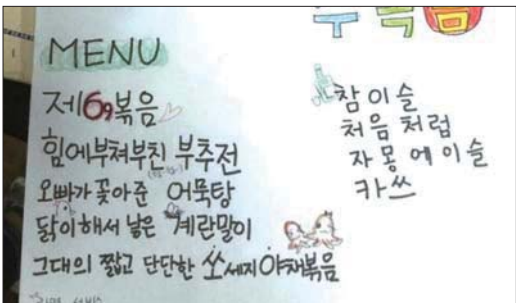
재하는 수렵채취인들의 관행 사이에서, 일반적 평등주의 외에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할 만한 것을 보여 주지 못한다. 관행의 다양성에 견혀해질 뿐 진화심리학자들이 설정한 모듈들을 지지해 줄 만한 공통성은 거의 없다.

변화

설령 진화심리학의 가정을 지지하는 관행이 인류학적 고찰을 통해 특정 집단에서 발견된다 하더라도 다른 집단의 관행들과 비교해 어느 것이 유전적 조상들과 더 비슷한지 알 도리가 없다. 오히려 다양한 인류학적 결과물들은 진화심리학자들이 현대의 고정관념들을 재활용해서 그것을 선사시대 사람에게 지나치게 투사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진화심리학의 추정은 현재까지 밝혀진 유전학과 인간의 뇌에 대한 이해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만일 진화심리학의 주장처럼 복잡한 모듈이 존재하고, 뇌 구조의 대부분이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면, 그 복잡성을 감안해 인간 게놈(genome)[유전체]은 인지적 발달이 덜한 동물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인간은 생쥐와 거의 같은 수의 게놈을 갖고 있다. 그나마 뇌의 구조에 관여하는 대부분의 유전자조차 진화심리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본능 모듈에 기여할 만한 고도의 인지 기능보다는 단순한 감각 기능을 만드는 데 관여한다.

인간에게 본능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인간의 본질은 각 개인에 내재하는 추상물이 아니며, 실제로 그것은 사회관계의 총체”(마르크스)라는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즉, 우리가 현 시점에서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구를 넘어 가장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면, 환경이 변함에 따라 함께 변하며 나아가 새롭고 다른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그것에 적응할 수 있는 특성일 것이다.



서평 《여성 혐오가 여성 혐오는

이현주

최근 여성운동 안팎에서는 이른바 여성 혐오가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문제로 지적돼 온 여성 혐오 발언들은 주로 인터넷 상에서 게시물, 댓글 형태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모욕, 조롱, 멸시 발언들이다. 단순히 여성차별적 의식을 드러내는 수준이 아니라, 혐오와 적대감에 기초해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공격을 찬양, 고무,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역겨운 표현들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김치녀'(경제력이 없으면서 부모나 남자친구 등의 지갑에 의존하는 여성을 일컫는 말), '삼일한'(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때려야 한다), '보슬아치'(여자인 것이 벼슬인 양 행동하는 것을 여성의 성기에 빗댄 말)와 같은 표현들이 있다.

《여성 혐오가 어쨌다구?》: 벌거벗은 말들의 세계》는 최근의 이런 '여성 혐오 현상'을 다루고 있다. 《페미니즘의 도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정희진 씨(이하 모든 필자에 존칭 생략)를 비롯해 여성학 연구자들과 성소수자 연구자, 인권운동가 여섯 명이 필자로 참여했다. 일부는 여성 혐오를, 다른 일부는 성소수자 혐오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필자들은 각각 초점을 달리하며 여성 혐오와 성소수자 혐오의 문제점과 원인에 대한 나름의 분석을 내놓고 있다.

먼저, 윤보라는 여성 혐오 발언들이 어떻게 여성들을 몇 가지 '나쁜 여성' 유형에 끼워맞춰 놓고 매도하는지를 잘 폭로한다. 한국 여성은 "극단적 개념 상실, 이기주의, 공동체 의식 부재, 쾌락과 허영에 환장하고, 남자와 사회공동체를 이용해 개인적 이득만 챙기려는 몰염치"한 자로 그려진다. 윤보라는 이런 매도가 신자유주의하에서 여성들이 겪는 고통을 은폐하는 구실을 한다고도 지적한다.

익명성에 힘입어 인터넷 상에 우익적·반동적 말들이 오가는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여성 혐오 발언들은 '역차별' 코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이기적'이라는 표상의 핵심은 여성들이 각종 '우대 정책'을 등에 업고 남성의 몫으로 배정된 지분을 앗아간다는 설정이다." 이제 더는 차별이 없는데도 여성들이 권리와 특혜를 누리는 바람에 남성들이 손해를 본다는 피해의식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다. 군 가산점 폐지가 이런 '피해 의식'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했고, 이에 따라 '여성부'와 페미니스트들은 '악의축'이 됐다.

한국에서 1990년대와 2000년대 동안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의 문제제기와 노력에 힘입어 호주제 폐지 등 법적·제도적 차별이 많이 개선됐다. 오늘날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대학에 진학하고, 노동시장에 대거 진출해 노동력의 중요한 일부가 됐다. 일부 여성들은 법관이나 국회의원, CEO가 되는가 하면, 대통령도 여성이다. 그래서 일부 여성들의 처지는 명백히 다수 남성 노동자들의 처지보다 낫다.

그러나 다수 여성들은 여전히 체계적인 차별에 시달린다.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특히 심각한 수준이다. 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도 뚜렷하다. 경제 위기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더 한층의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를 강요하고 있다. 일부 남성들의 '역차별' 주장은 일부 여성

대학 축제의 성 상품화 중단하라

양효영 대학생,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활동가

얼마 전 한 대학 축제에서 성 범죄를 소재로 주점 메뉴 이름을 지어 논란이 됐다. 해당 학과는 '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 했다고 변명했지만 명백히 여성에 대한 강간과 살인을 희화화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대학 축제에서 여성에 대한 비하적 표현이나 여성의 성적 이미지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분위기는 결코 한두 대학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한 대학 주점 천막에는 '술도 먹고 너도 먹고'라는 홍보 문구가 크게 적혀 있다. 주점 메뉴들의 이름은 일부러 '야동' 제목을 연상케 만들어졌다. 주점에서 여학생들이 몸에 딱 붙는 치파오나 가터벨트, 망사스타킹을 신고 호객행위를 하는 것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축제 중 데이트할 여성을 경매하는 "노예팅"도 있다. 축제만이 아니라 대학 동아리 공연 포스터 등에서 심심치 않게 성적 이미지와 표현들이 등장한다.

대학의 '야한 문화'는 오늘날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야한 문화'의 일부다. 1990년대 여성 가수의 배꼽티를 두고 큰 논란이 벌어졌던 보수적인 분위기는 이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아이돌 가수들의 노출과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안무는 이제 더는 놀라운 일도 아니게 됐다. 한국에서도 텔레비전에서 봉춤이 여성에게 좋은 운동으로 소개되고 있고, 온갖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은 여성 연예인의 몸매를 카메라로 훑어 내리기 바쁘다.

이런 상황이 뭐가 새로운 걸까? 여성들은 오랫동안 성적 대상으로 여겨져 오지 않았나? 고깃집 벽에 붙어 있는 소주 광고부터 핸드폰 기기변경 광고까지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엔 여성의 성적 대상화가 "자신감 상승"이라는 이름으로 부

추겨지고 있다.

얼마 전 여성단체들의 거센 항의로 폐지된 <렛미인>은 "뚱뚱하고 못생긴" 여성들의 인생을 성형수술로 "구제"해 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참가 여성을 때리고 폭언을 일삼고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이 성형수술 후 "완벽한 모습으로 거듭난" 참가 여성을 보고 180도 바뀐 태도를 보여준다. 외모와 성적 매력에 여성의 자신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비슷한 취지에서 최근 몇몇 총학생회는 취직 면접 자신감을 높여준다고 성형수술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지난 7월 국립국어원은 '몸매가 착하다'는 말을 표준어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의 신체는 이제 겉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심성까지 표현하게 됐다. 이제 여성의 몸은 부위마다 '애플힙', '물방울 가슴' 등 등급이 매겨져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준에 맞게 몸을 가꿔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됐다. 매년 여름철 날씬한 몸매를 위해 끼니를 걸러서 영양성 빈혈로 병원을 찾는 10~20대 여성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또 성 상품화는 성을 인간의 본성에서 따로 떼어내 낯선 것으로 만든다. 성이 관계 속의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통제 바깥에서 사고팔리고 평

가받는 것이 됐다. 성이 상품화된 사회에서 사람들은 서로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단순히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기 쉽다. 더 높은 토익 점수와 더 많은 자격증처럼 성적 능력도 하나의 '스펙'이 돼버려, 자신의 성적 능력을 보여 줘야 한다는 압력에 시달린다. 남성들은 카사노바처럼 수많은 여성의 신체를 탐하고, 여성들은 섹시한 몸매를 통해 남성을 성적으로 유혹하고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이 '능력'이 됐다.

낯선 성

성이 더욱 상품화될수록 우리는 성을 진정으로 누릴 수 없게 됐고 성에 대한 왜곡된 관념만 부추겨졌다. 성적 표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노골적인 시대이지만 진정한 성과 인간관계에 대한 교육은 형편없이 부족하다. 올해 8월 교육부는 "(남성의) 성에 대한 욕망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충동적으로 급격하게 나타난다", "지하철에서 성추행 당하면 실수인 척 발등을 밟는다" 등 황당한 내용이 포함된 성교육 자료를 일선 학교에 내려 보냈다.

지난해 이맘때 숙명여대 총학생회는 축제 의상 규제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선 여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복장규제는 '필요악'이었다는 입장이 존재했다. 다른 한편 김여준은 이를 두고 "조신한 딸 콤플렉스"라고 했고 <한겨레> 정혁

준 기자 역시 '차도르와 부르카라도 필요하냐'며 "꼰대스러운" 결정이라 비판했다.

후자 같은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성 상품화에 내재돼 있는 엄연한 여성 차별을 '쿨하게' 없는 셈 취급하자는 것이다. 성 상품화 광풍으로 말미암아 여성 개개인이 느끼는 압력과 고통에도 무관심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 그렇다고 의상을 강제로 규제하는 것 역시 성 상품화라는 엄연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여성 개개인을 '해픈 여자'로 비난한다는 문제가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성을 더 자유롭게 즐기고 성에 대해 개방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지지한다. 그러나 성 상품화는 오히려 진정한 성 해방을 가로막는다. 대학 축제에서 온갖 성적 표현들이 난무하고 심지어 '남성 잡지인' <맥심>은 강간 살해와 여성에게 약물을 먹여 성폭행하는 것도 소위 '섹시한' 문화로 포장해 상품으로 팔지만, 게이나 레즈비언들의 조건 없는 사랑은 이상하고 역겨운 것으로 억압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 내에서 성 상품화나 여성 차별적 문화에 반대하는 것은 대학 내 좌파들의 중요한 과제고 임무다. 성 상품화는 여성을 인격체가 아니라 사물처럼 대상화함으로써 마치 여성을 '보기 좋은 것', '소유할 것'으로 여기는 생각을 정당화하며 여성 차별을 '세련되게' 재생산할 뿐이다. 대학 내에서 여성과 남성이 단결해서 성 상품화에 맞서고, 진정한 성 해방에 대해 토론하고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에선 대학생 대상의 '랩댄스 클럽'에 반대하는 운동이 조직되기도 했다.

물론 성 상품화는 자본주의 체제의 한 증상이므로 자본주의 체제를 폐지하는 것만이 성 상품화를 없애고 진정한 성 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다.



대학의 성 상품화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 상품화의 일부다.

어쨌다구? 벌거벗은 말들의 세계》

남성의 지배 전략이 아닌 차별적 체제의 단면

들의 성공 이면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런 여성차별의 현실을 보지 않는 것이다.

군 가산점 폐지를 근거로 여성을 공격하는 것도 가당치 않은 주장이다. 물론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동원된 남성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병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지 여성의 책임이 아니다.

‘여성 혐오 현상’, 왜?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몇 년간 온라인 상의 여성 혐오 발언이 늘어난 이유는 뭘까.

여성차별을 아로새기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차별적 의식을 받아들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본주의는 자본축적에 필요한 노동력 재생산 임무를 노동계급 가족(여성)에 떠넘긴다.지배자들은 이런 임무를 강요하고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려고 온갖 차별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한다. 자본주의의 소외 때문에 체제에 대한 노동계급의 불만과 분노는 종종 계급 내의 다른 이들을 향한 공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의 혐오 발언은 특히 깊어지는 경제 위기와 청년 실업, 그것이 낳은 좌절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경제 위기와 청년 실업의 영향은 여성들에게도 고스란히 미치고 있는데도, 일부 보수적 남성들이 ‘이제 여성 상위시대가 됐다’는 과장된 인식 속에서 여성에게 엉뚱한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 여성 혐오를 다룬 저자들은 경제 위기와 실업이 낳은 효과를 한 번씩 언급은 하면서도 근본 원인은 다른 데서 찾는 듯하다.

가령 윤보라는 “최근의 여성 혐오 현상이 높은 청년 실업률이나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의한 남성의 좌절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은 선부른 단정”이라고 본다. 오히려 여성 혐오를 “여성의 주체성을 삭제하려는 작업”, “주체의 위치에 서고자 한 여성들을 저지하는 [남성들의] 투쟁”과 연관시킨다. 2008년 촛불항쟁을 계기로 여성들이 정치적 주체로 등장한 상황에서 이런 작업이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임옥희는 정신분석학을 사용해, 여성은 남성의 낙약함을 드러내는 존재이므로 원초적으로 남성은 여성을 두려워하고 혐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또 정희진은 “여성 혐오 발화는 가부장제의 일상”이라고 보고, ‘남성들의 언어’에 의해 여성들이 만들어져 왔음을 강조한다. 시우는 여성 혐오가 남성 간의 유대와 지배적 위치 유지·공유를 위해 필요해진다고 주장한다.

즉, 각각 내용은 다르지만 저자들은 대체로 여성 혐오 현상을 남성들의 공통된 이해관계에서 비롯한 필요·전략과 연관시킨다. 물론 여성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자들이 거의 다 남성이고 여성에 대한 끔찍한 편견과 비하, 적대를 드러내는 걸 보면, 여성 혐오가 근본에서 성 적대에서 비롯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표면적인 현상 설명은 될 수 있어도 구체적인 현실에 기초한 분석은 못 된다.

이런 관점이 남성을 단일한 이해관계를 공유한 집단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다. 필자들은 여성을 단일한 집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모순적이게도 남성은 단일한 집단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남성 역시 단일한 집단이 아니다. 남성들 사이의 계급적 차이 때문에 자본가·국가관료의 삶과 노동계급 남성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국가관료는 실질적 권력을 휘두르지만 노동계급 남성은 자신(과 여성)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 여성을 체계적으로 차별함으로써 이득을 누리는 장본인도 소수의 남성(과 소수 여성)들이다.

여성차별이 체계적으로 유지되는 사회에서 남성 대부분이 여성차별적 의식을 어느 정도씩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더 적극적인 의미의 ‘혐오와 적대’를 드러내는 남성은 소수라는 점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나아가 혐오와 적대감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들은 더 적다.)

여성 혐오자들이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세계를 넘어 오프라인으로까지 유의미하게 세를 확대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 보수적 성향의 언론들조차 혐오 발언을 부정적 낙양스로 보도한다는 점, 혐오 발언을 한 연예인들이 여론의 못매를 맞고 활동을 중단해야만 했다는 점 등은 결코 여성 혐오 발언이 대중한테서 큰 호응을 얻지 못했음을 방증한다.<<조선비즈>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이라도 20대에서 ‘일베’에 공감한다고 답한 사람은 8.6퍼센트뿐이었다.)

변화

여성 혐오를 다룬 저자들이 대체로 한국사회 전반에 여성 혐오가 퍼져 있다고 전제·암시한다. 그러나 사실 온라인 상의 혐오 발언이 늘어난 시기인 2000년대 동안에도 남녀 대중의 의식은 전반적으로 발전하는 추세였다. 지난 30년 동안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꾸준히 확대돼 왔는데, 이런 물질적 현실의 변화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의식



여성 혐오가 어쨌다구?

— 벌거벗은 말들의 세계

윤보라·임옥희·정희진·시우·루인·나라 지음
현실문화, 256쪽, 14,000원

과 개별적 관계들에 영향을 미쳤다. 임금노동을 하면서 여성들은 주체적 권리와 필요, 욕구를 지닌 존재임을 자각했다. 그 결과 여자는 집에서 아이와 남편의 뒷바라지나 해야 한다는 전통적 여성관은 약화해 왔고, 개별적 관계도 평등지향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가령 통계청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가사분담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인이 가사를 주도하는 경우’는 2008년 89.4퍼센트, 2010년 87.4퍼센트, 2012년 80.5퍼센트였고, ‘부인이 전적으로 가사를 책임지는 경우’는 각각 33.4퍼센트, 31.2퍼센트, 24.4퍼센트로 소폭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여전히 가사의 많은 부분을 여성이 맡고 있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로 남성이 가사를 분담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여성은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중요한 일부가 됐다.(윤보라는 2008년 촛불항쟁을 계기로 여성이 정치적 주체가 됐다고 분석하지만, 여성들은 노동계급에 편입되기 시작한 자본주의 초기부터 언제나 저항운동의 중요한 일부였다.)

이런 투쟁의 경험은 여성과 남성 노동자 모두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물론 사람들의 의식은 불균등하고 한 사람의 의식도 모순돼 있다. 의식이 단선적으로 또는 자동으로 발전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여성차별을 체계적으로 지속함으로써 유지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의식 발전에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물질적 조건의 변화와 함께 대중의 의식이 변화해 왔다는 사실은 사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할 필요성을 보여 준다. 몇몇 인터넷상에서의 악성 저질 발언들이 대중 의식의 표본이라고 가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오늘날 여성들이 수세에 몰려 있고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사이의 단결은 요원하다는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 여성 혐오를 다룬 이 책의 저자들은 남성집단이 단일하다는 가정으로 말미암아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분석하고 있지 못하다.

여성 혐오적 발언과 표현들은 우리가 여전히 지독하게도 차별적인 체제에 살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한 단면이다. 또한 오늘날 여러 법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해방은 쟁취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보여 준다. 여성차별과 천대는 (남성 일반의 지배욕이 아니라) 자본주의 가족제도와 착취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자본주의라는 계급사회의 필요 때문에 여성차별 이데올로기는 체계적으로 부추겨진다. “벌거벗은 말들”에 맞서려면 그것을 재생산하는 원천인 차별적 체제에도 맞서야 하는 이유다.

요컨대, 이 책은 최근의 여성 혐오 현상이 어떤 방식으로 벌어지는지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지,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천대와 차별은 어디서 비롯하는지에 대해서는 유용한 분석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다.

성소수자 혐오의 정치적 배경

이 책에는 성소수자 혐오와 관련해서도 두 편의 글이 실려 있다. 먼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운영위원이자 《무지개 속 책적: 성소수자 해방과 사회변혁》(책갈피)의 옮긴이인 나라는 최근 성소수자 혐오 세력이 성장한 과정과 그 배경, 그리고 이에 맞선 성소수자 운동의 대응에 대해 짧은 글이지만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특히 나라는 한국의 성소수자 반대운동의 성장을 “사회적 위기가 심화되고 복지와 노동조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상황”과 연결시키고 소수자 속죄양 삼기가 결국 사회 전체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유지하기 위한 프로젝트임을 밝힌다. 뿐만 아니라 나라는 한국에서 성소수자 혐오 세력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지지 기반이고, 정권 실세들 가운데 상당수가 직간접적으로 성소수자 반대 운동과 연결돼” 있음을 폭로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성소수자 반대 운동은 행동주의를 강화해 왔고, 국가기관은 공공연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겨 왔다. 이 때문에 성소수자 운동은 최근의 성소수자 혐오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그럼에도 나라는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이 이런 혐오에 대응해 나가면서 성장했고, 진보진영 내 연대로 확대되는 등 성과도 있었다는 점을 균형있게 다루고 있다.

한편, ‘트렌스/젠더/퀴어연구소’의 루인의 글은 주로 페미니즘과 성소수자 운동 내의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에 대한 편견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루인은 여성운동 내에서 트랜스젠더여성이 “인공적인 존재”, “여성성을 강화”하는 부적절한 존재로 여겨져 왔음을 비판하고, ‘자연적 몸/젠더’와 ‘인공적 몸/젠더’라는 이분법과 여성을 “단일하고 동질적 범주로” 보는 관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성운동에 대한 루인의 비판에 공감한다.

포스트모더니즘적·후기구조주의적 페미니즘의 한계

한편, 루인의 주장은 포스트모더니즘·후기구조주의의 논의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관점은 정희진의 글에서도 묻어난다.

포스트모더니즘적·후기구조주의적 페미니즘은 ‘여성범주 자체를 해체’하고 여성이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여성을 생물학적, 경험적, 정치적으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으로 간주하는 급진주의 페미니즘(정체성 정치)에 대한 반대에서 출발했다. 이 정치에 따르면, 같은 여성 내에서도 성·인종·계급·장애·성지향·민족·직업 등 다양한 정체성이 공존한다.

포스트모더니즘적·후기구조주의적 페미니즘이 정체성 정치를 비판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정체성 정치는 루인이 든 사례와 같이 트랜스젠더처

럼 ‘원래 여성의 몸이 아닌 여성’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여성이 모두 다 다르다는 포스트모더니즘과 후기구조주의가 억압에 맞서 싸우기에 효과적인 사상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제기하는 ‘차이의 정치’에서는 모든 억압이 개인마다 다르고 상대적이다. 물론 개인들이 겪는 차별의 구체적인 양상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억압을 없애려면 억압을 묘사하고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억압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과 후기구조주의는 억압을 착취적 사회구조와 분리시키고 개별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총체성을 거부하고 어떤 문제를 단일한 원인과 구조로 설명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 대신, 불확실성과 불확정성, 현실의 다양

하고 파편적인 특징들을 강조한다.

이렇게 총체성을 거부하는 관점은 억압의 물질적 기초를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억압에 맞서 효과적인 투쟁 전략을 세울 수 없다. 여성차별과 동성애 차별은 노동력 재생산 임무를 개별 가족에 떠넘기고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려는 자본주의 필요 때문에 유지된다. 따라서 차별을 없애려면 자본주의라는 계급사회를 공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계급은 여러 다른 차별 중 하나가 아니다. 계급은 개인들이 억압의 경험이 다를지라도 계급을 토대로 단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다른 한편, 포스트모더니즘적·후기구조주의적 페미니즘은 ‘여성’은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애초에 ‘여성’을 ‘여성’이라고 구분할 만한 본질적 특징이란 없다고 보고, 남/여 구별과 범주

화를 완전히 해체해 버린다. 이 관점에 따르면 성기와 같은 신체적 차이도 남/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관점은 구별과 범주화 자체가 차별을 낳는다고 보는 듯하다. 정희진은 “인간을 sex을 기준으로 구분gender해야만 가부장제 사회가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가 고정된 여성성과 남성성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이를 강요하는 것은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 사이에 신체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런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자본주의 시스템이지 구별 자체가 아니다. 구별 자체가 차별을 낳는다고 보는 관점은 이데올로기와 담론의 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이고, 자본주의에서 여성차별의 물질적 기초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임금피크제에 이어 저성과자 퇴출제, 성과연봉제 공격

공공부문 파업을 지지하라

이정원

정부가 8~9월에는 공공기관에 임금 피크제 도입을 밀어붙이더니 이제 저성과자 퇴출제와 성과연봉제 공격의 칼날을 꺼내 들었다. 10월 5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저성과자 퇴출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 발표도 곧 뒤따를 예정이다.

그 직전인 10월 1일에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성과 미흡자를 퇴출하겠다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노사정위 야합 이후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본격화하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에 사상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였다. 그 뒤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강요하려고 청년과의 이간질, 경영평가 점수와 임금 인상 차등 적용 카드 등을 휘둘렀다. 그러더니 이제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겠다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철밥통' 깨기에 본격 나선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고용 증대, 효율성 제고를 통한 공공서비스 증진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정부 산하 기구인 우정사업본부에서 일하는 집배원 노동자들은 연간 법정노동시간을 1백60일이나 초과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토요 근무까지 부활됐다. 이처럼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기존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업무를 강요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장본인은 바로 정부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신규 고용을 8천여 명 창출하겠다고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은 죄다 관참은 일자리를 축소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가령 정부는 철도에서만 무려 2천7백여 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외주화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기능조정'이라는 이유로 줄줄이 사업 통합과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인데, 이는 모두 인력감축으로 이어진다.

지난 8월 강남역 스크린도어를 수리 하던 청년 노동자의 사망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 업무를 외주화한 데서 비롯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정원 확대는 고사하고 정원조차 채우지 못한 공공기관들에서 부족 인력을 채워 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조차 묵살해 왔다.

공공부문 파업의 의미

이런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공공운수노조가 10월 15일 공공부문 파업을 결정했다. 이는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하며 정당한 투쟁이다.

정부가 임금체제와 일반해고 요건 완



1만여 노동자들이 모여 박근혜의 공격에 대한 분노를 보여 준 7월 4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투쟁 결의대회.



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머지않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노동 개악 법안의 국회 상정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공공기관 저성과자 퇴출제와 성과연봉제 압박도 이미 시작됐다.

공공운수노조가 지적하듯 "특히 공공부문과 미조직 노동자의 경우 정부 지침이 법 이상의 효력을 갖는 만큼, 전례 없는 단호한 투쟁이 필요"한 때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반대하고 공공부문의 질 좋은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며 투쟁을 강력하게 벌여, 정부의 위선을 속속들이 드러내야 한다. 투쟁만큼 강력한 비판의 무기는 없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공부문을 방어하기 위해 단호한 투쟁에 나선다면 광범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려면 10월 15일 파업이 성공적으로 조직돼야 한다. 여기서 철도, 가스,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같은 대규모 공공기관 노조들의 실질적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노조의 활동가들은 공공운수노조의 파업 지침을 자기 노조 집행부가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기층에서 파업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기재부는 10월에 아직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대규모 공공기관을 직접 압박하고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공공기관 노조 지도자들을 어떻게든 교섭 자리에 앉혀서 각개 격파하는 책략을 부리고 10월 15일 파업을 무력화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경계해야 한다.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 노조들은 임금피크제 합의를 계속 거부하고, 기재부가 연내 공공기관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예고한 만큼, 임금피크제 저지와 저성과자 퇴출제·성과연봉제 저지를 함께 내걸고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공공부문 파업의 성공에는 단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방어만 달려 있는 게 아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공격을 지렛대로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탄력을 얻는 전술을 취하고 있다.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조건 방어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하는 이유다.

또 공공부문 파업이 성공적으로 벌어지면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을 고무해 전체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투쟁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 점에서도, 공공부문 파업을 성실히 지지해야 한다.

철도노조 임시 대대는 실질적 파업을 결의해야

철도노조는 10월 8일 임시대대를 열고 쟁의 발생을 결의할 예정이다.

그런데 철도노조 집행부는 "공사의 입장 변화가 있을 시 조정 절차 등을 통하여 교섭에 임할 것"이라며 교섭에 미련을 두고 있다. 이런 접근은 사측에게든 조합원들에게든 파업 결의가 그저 교섭 압박용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특히 김영훈 위원장이 "청년 실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현장 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교섭에 참여한다고 설명한 것은 위험하다.

노동운동 안팎의 많은 사람들이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길이 될 수 없다고 박근혜의 위선을 비판하고 있다. 설사 사측이 임금피크제를 관철하는 대가로 인력 증원은 내준다고 그것은 생색내기 이상이 되기 어렵고, 무엇보다 공공부문 쥐어짜기 정책을 철회하는 것도 결코 아닐 것이다.

철도노조 집행부는 임금피크제 수용을 전제로 한 협상안을 폐기하고, 진지하게 파업 준비에 나서야 한다. '좀 더 나은 임금피크제' 같은 요구로는 결코 조합원들의 투지를 모을 수 없다.

10월 8일 철도노조 임시 대대는 실질적인 투쟁과 파업을 결의하는 자리여야 하고, 10월 15일 공공부문 파업에 적극 나설 것도 결의해야 한다.

철도 활동가들은 임시 대대에서 임금피크제 협상안을 폐기하고 저지 입장을 채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사측이 저성과자 퇴출제 칼날을 들이밀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임금피크제 반대와 함께 저성과자 퇴출제, 성과연

봉제, 외주화와 민영화 저지를 투쟁 요구로 채택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대대 때 괜히 논란을 벌여 쟁의 결의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활동가들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투쟁 대안을 제기하는 것은 사기를 북돋고 투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투쟁에 중심을 뒀야 한다

하루 파업으로 정부의 완강한 공격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만큼 이 파업을 발판으로 투쟁을 지속하고 11~12월 파업으로 이어가야 한다. 그러려면 공공운수노조 지도부가 확고하게 투쟁에 중심을 뒀야 한다.

특히 하반기 공공기관 예산 편성 지침을 논의하는 시기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투쟁 시기와 맞물릴 수 있다. 이때 정부가 투쟁 전선 교란을 위해 노정교섭 카드로 발목을 붙잡으려 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하반기에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 같은 과제를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동안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들이 주축이 돼 준비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인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러나 이런 방향은 새정치연합과의 공조 등 국회 대응에 힘을 싣는 것으로 나아가 수 있다. 국회 밖 투쟁에 기반하지 않는 국회 대응은 무기력할 뿐 아니라 야당의 뒤통수 치기에 속절없이 당할 수 있다.

투사와 활동가들은 10월 15일 공공부문 파업의 성공적 조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투쟁을 확대하고자 애써야 한다.